

---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 제 출 문

---

부산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  
계승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22년 4월

연구기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연구진

---

총괄책임자 이동일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

책임연구원 차철욱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교수

연구원 홍순연 삼진이음 이사

연구원 강정원 부산대학교 사학과 교수



## [목 차]

I. 과업 개요 .....	1
1. 개요 .....	1
2.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	1
3. 과업의 범위 .....	1
4. 과업의 특징 및 기대효과 .....	1
5. 과업 추진체계 .....	2
1) 전담인력 현황 및 조직구성 .....	2
2) 과업 목차 변경 .....	2
3) 과업 수행계획 .....	3
II.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	4
1.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의 의미 설정 .....	4
1) 기념사업의 방향 .....	4
2) 부산 미래유산의 축적 .....	4
3) 민주화운동의 의미화와 가치 공유 .....	4
2. 민주화운동 관련 정책 및 현황분석 .....	5
1) 부산시 민주화운동 기념정책 .....	5
2) 중앙정부 민주화운동 기념정책 .....	8
3)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정책 .....	10
3. 평가지표 .....	13
III. 부산 민주화운동 개요 및 개념 정의 .....	15
1. 부산 민주화운동 개요 .....	15
1) 시대별 민주화운동의 특징 .....	16
2) 부문별 운동 .....	22
2. 민주화운동의 정의 .....	25
1) 제도화된 민주화운동의 개념 .....	25
2) 민주화운동 개념의 확장 .....	26
IV.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과제 도출 .....	27
1. 기념 및 희생자 추모 .....	27
2. 연구 및 자료조사 .....	33
3. 교류 협력 .....	43
4. 교육 .....	46
5. 홍보 .....	51
6. 전시시설 .....	54
1) 전시시설 세부계획 .....	54
2) 각 구역별 계획수립 .....	55

3) 세부계획 수립 .....	57
4) 소결 .....	81
V. 추진 전략 및 자원 조달 방안 .....	83
1. 정책 목표 및 비전, 추진전략 .....	83
2. 연차별 추진계획 .....	86
3. 자원조달 방안 .....	87

## [표 목차]

<표 1> 부산시 민주화운동 관련 조례 .....	7
<표 2> 중앙정부의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 제정 .....	8
<표 3>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 조례 .....	10
<표 4> 광주광역시 5.18정신계승 및 선양 사업 .....	11
<표 5> 평가지표별 세부 평가방법 .....	13
<표 6> 부산 민주화운동 유적지 .....	34
<표 7> 전국 민주화운동 네트워크 구축 대상 .....	43
<표 8> 5.18기념재단 오월학교 프로그램 .....	47
<표 9> 문화 및 집회시설 시 이행조건표 .....	81
<표 10> 추진전략 .....	83
<표 11> 연차별 추진계획 .....	86
<표 12> 2020년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수입구조 .....	87
<표 13> 2020년 5.18기념재단 수입 구조 .....	87

## [그림 목차]

<그림 1> 전담인력 현황 및 조직구성 .....	2
<그림 2> 과업 목차 변경 .....	2
<그림 3> 과업 수행계획 .....	3
<그림 4>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 홈페이지 .....	10
<그림 5> 광주광역시 5.18 관련 홈페이지 .....	12
<그림 6> 4.3평화재단 온라인 참배 .....	29
<그림 7> 5.18기념재단 사이버 참배 .....	29
<그림 8> 오성을 기억하다, 기록하다1 .....	30
<그림 9> 오성을 기억하다, 기록하다2 .....	30
<그림 10> 오성을 기억하다, 기록하다3 .....	30
<그림 11> 인디게임페스티벌(게임X한국사) .....	31
<그림 12> 해보면 감동하리 4번지 .....	32
<그림 13> 생활예술 문화축전(청년예술제) .....	32
<그림 14> 부산물고기, 어디서 무엇이되어 다시 만나랴~ .....	32
<그림 15> SEEDS(기획공연) .....	32
<그림 16> 서울 신림동 박종철 거리(2018년 조성) .....	36
<그림 17> 부산 중구 박종철 거리(2019년 조성예정 거리, 현재 명명단계) .....	36
<그림 18> 제주4.3 다랑쉬오름과 다랑쉬굴(카카오맵) .....	37
<그림 19> 고 강수영 열사 추념탑 .....	38
<그림 20> 6월항쟁 중심지 표석 .....	38
<그림 21> 오월걸상 .....	38
<그림 22> 4.19혁명의 진원지 표지석 .....	38
<그림 23> 서울 휴먼라이브러리 .....	41
<그림 24>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	44
<그림 25> 제주4.3 전국청소년 영어스피치대회 .....	44
<그림 26> 서울 민주화운동 역사지도 .....	48
<그림 27> 서울 민주화운동 역사지도 세부 .....	48
<그림 28> 부산민주항쟁 부산코스 .....	49
<그림 29> 부산민주항쟁 마산코스 .....	49
<그림 30> 구글맵에서 검색한 4.3 유적지 .....	49
<그림 31> 5.18 기념재단의 오월길 .....	49
<그림 32> 민주공원에서 운영하는 부산민주역사길 .....	50
<그림 33> 예술후원캠페인 .....	52
<그림 34> 음악사운드 아트특화사업 .....	52

<그림 35> 친환경아트공모전 .....	52
<그림 36> 5.18 추모탑 뱃지 .....	52
<그림 37> 전남도청 전자파 차단 스티커 .....	52
<그림 38> 경북 독립운동 굿즈 홍보영상 .....	53
<그림 39> 경북 독립운동 굿즈 이야기 .....	53
<그림 40> 세부계획 방향설정 .....	54
<그림 41> 세부계획 기본방향의 틀 .....	55
<그림 42> 동래 금정권역 주요 기념비 및 장소 .....	56
<그림 43> 서면권역 주요 기념비 및 장소 .....	56
<그림 44> 서면권역 주요 기념비 현황 .....	56
<그림 45> 각 권역별 계획 및 주요 기능 재설정 .....	57
<그림 46> 민주공원 주변 거점시설 현황 .....	58
<그림 47> 민주역사문화 필드뮤지엄 세부기능 .....	59
<그림 48> 민주공원 민주주의 필드뮤지엄 기능 재배치 .....	60
<그림 49> 대청로 부근 역사적 유산들 .....	60
<그림 50> 역사적 스토리와 결합한 프로그램 예시 .....	61
<그림 51> 통일된 심벌 및 공공디자인 이미지화 .....	62
<그림 52> 심벌을 활용한 통합디자인 예시 .....	62
<그림 53> 역사적 기념물 트렌드 사례 분석 .....	63
<그림 54> 온오프라인 전시기술의 변화 .....	64
<그림 55> 전시구성에 따른 세부 체크 요소 .....	65
<그림 56> 민주항쟁기념관에 적용 가능한 유형 .....	66
<그림 57> 민주항쟁기념관 상설전시 현황 .....	67
<그림 58> 민주항쟁기념관 기획전시 현황 .....	67
<그림 59> 민주공원 주변 주요 극장 현황 .....	68
<그림 60> 원도심 내 공연공간의 한계 .....	68
<그림 61> 민주항쟁기념관 중극장 및 소극장 현황 .....	69
<그림 62> 구)상설전시 VR아카이브전시 전환사례(대한민국역사박물관) .....	69
<그림 63> 상설전시 수용 가능한 공간 유형 .....	70
<그림 64> 기획전시 공간을 복합공간으로 전환 .....	71
<그림 65> 다목적기능 수용-중강당 세부계획 .....	72
<그림 66> 연극 및 소공연 수용- 소강당 세부계획 .....	73
<그림 67> 리모델링 절차 .....	74
<그림 68> 민주공원 중심 민주역사 문화필드 뮤지엄을 위한 세부 역할 및 과제 .....	82





# 1. 과업 개요

## 1. 개요

용역명 :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과업기간 : 2021. 10. 28. ~ 2022. 04. 25. (착수일로부터 6개월)

수행기관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2.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 1) 연구배경 :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 기념, 정신계승
- 2) 추진근거 :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제6조
- 3) 필요성 및 목적
  - (1) 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민주화 정신계승을 위한 체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2) 실질적인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사회적 욕구와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부산지역의 민주화운동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고 심화시키기 위한 정책 수립

## 3. 과업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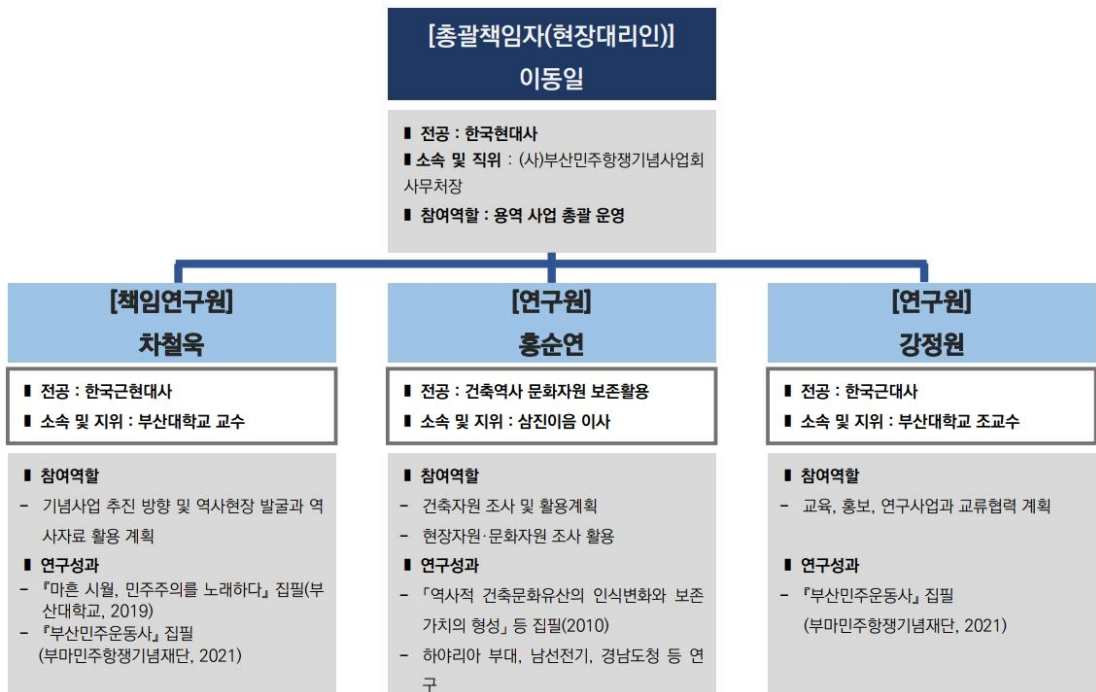
- 1) 공간적 범위 : 부산광역시 전역
- 2) 시간적 범위 : 정책기간 2022년 ~ 2026년(총 5개년)
- 3) 내용적 범위
  - (1)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 (2)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과제 도출
  - (3) 추진과제 실행을 위한 방안 마련
  - (4) 부산 및 타 시·도 민주화운동 관련 정책 및 현황 분석

## 4. 과업의 특징 및 기대효과

- 1) 부산 민주화운동의 추모, 연구, 교육, 홍보의 체계적인 수행 가능
- 2) 부산 민주화운동의 내용과 정신을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3) 부산 민주화운동을 부산의 정체성으로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5. 과업 추진체계

## 1) 전담인력 현황 및 조직구성



<그림 1> 전담인력 현황 및 조직구성

## 2) 과업 목차 변경

	과업지시서 목차	목차 변경
1	민주화 정신계승을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의 의미 설정 -기념 정책 목표, 방향제시:정책비전, 목표, 5개년 주요 핵심자료 발굴 -평가지표 마련	민주화 정신계승을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의 의미 설정 -민주화운동 관련 정책 및 현황분석(부산, 타시도 정책 사례조사) -기념 정책 목표, 방향제시:정책비전, 목표, 5개년 주요 핵심자료 발굴 -평가지표 마련
2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과제 도출 -기념 및 희생자 추모 -역사현장 발굴, 보존 및 활용 -교육,홍보,연구 -교류,협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과제 실행방안 -기념 및 희생자 추모 -연구 및 자료조사 -교육,협력 -교육 -홍보 -전시시설
3	추진과제 실행을 위한 방안 마련 -각 추진과제별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핵심사업 제안 및 중장기 추진 전략 마련 -추진과제 실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추진 전략 및 자원 조달방안 -핵심사업 제안 및 중장기 추진 전략 마련 -추진과제 실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4	민주화운동 관련 정책 및 현황 사례조사 -부산 지역 내 민주화운동 관련 정책 및 현황 분석 -타 시·도 민주화운동 관련 정책사례조사	1번 항목으로 이동

<그림 2> 과업 목차 변경

3) 과업 수행계획

구분	2021년			2022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착수보고							
사업방향 설정과 수행계획							
실태조사·자료수집							
목표와 발전 전략							
실행방안 및 과제 제시							
중간보고							
내부 검토와 수정 보완							
최종보고와 결과물 제출							

<그림 3> 과업 수행계획

## II.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 1.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의 의미 설정

#### 1) 기념사업의 방향

- 부산에는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해 다양한 구성원들에 의한 집단기억이 존재.
- 부산 시민들이 공유하는 대표적인 집단기억으로는 임진왜란, 근대개항, 식민도시(항일운동), 한국전쟁(피란수도), 공업화, 민주화운동 등. 부산 지역성이 지니는 다층성과 다양성을 확인 가능.
- 부산 민주화운동을 시민들이 공유하는 집단기억으로 만들 필요있음. 이는 다양한 기념사업, 즉 기념화, 연구, 교육 등을 통해 가능함.
- 기념사업은 사건의 당사자나 유족들의 기억투쟁을 넘어 기념사업의 소비자인 불특정 다수(미래세대)의 현실적 욕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문화로 재현될 필요(축제, 놀이 요소를 포함한 유희성 증대)
- 사건과 관련한 민주화운동 관련 주체들의 지향 가치와 시민들의 욕구와 연결할 수 있는 개념화/의미화 작업 필요함.

#### 2) 부산 미래유산의 축적

- 부산 미래유산은 2019년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2019.11.06.)에 근거해 “부산을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2조 2항)으로,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됨.
- 2019년 1차 지정에서 미래유산 1호로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 기념 장소이자 교육의 장으로 민주공원이 선정되었고, 그 외 6월항쟁도, 부산양서판매이용협동조합 등이 지정됨.
- 부산의 미래유산으로 민주화운동 관련 유산이 다수 지정된 것은 부산 시민들의 집단기억에 민주화운동이 가치있는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으며, 미래세대에 전승되어 공유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근거가 됨.
- 부산 미래유산으로 부산 민주화운동 관련 유산을 조사, 연구, 교육하는 것은 과거-현재-미래세대가 공유하는 기억과 유산을 가진다는 점에서 의미있음. 이를 위해 기념사업의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함.

#### 3) 민주화운동의 의미화와 가치 공유

- 부산 민주화운동은 한국민주화운동의 보편적 가치와 함께 지역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

- 국제도시로서의 개방성과 문화적 다양성:근대적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의 형성 계기
- 민주화운동의 기념사업은 부산 사람들이 경험한 가치공유의 기회가 될 수 있음.

## 2. 민주화운동 관련 정책 및 현황분석

### 1) 부산시 민주화운동 기념정책

#### (1) 개요

- 부산시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담당기구가 통일되지 못하고 다양한 기관 및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음.
- 4.19혁명 기념행사 및 그 보훈대상자 관리-행정자치국(총무과)
- 부마민주항쟁기념식,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위원회 운영, 민주공원 운영-인권노동정책담당관
- 1999년 민주공원이 설치되고, 이를 위탁받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부산시와 공동으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부산시에서도 2017년 조례안을 만들어 기념일 지정 및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 『부산민주운동사』 발간/재발간

- 부산시는 1998년 『부산민주운동사』를 간행하여 부산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집대성하였음. 서술의 범위는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부터 1992년 문민정부 시대의 민주화운동까지 서술하였음.
- 2021년 『부산민주운동사』를 재발간하였음. 1998년 『부산민주운동사』의 보완, 수정과 1990년대 이후의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추가하였음.
- 2021년 재발간 『부산민주운동사』는 1, 2권으로 구분하여, 1권은 일제강점기 항일운동~1987년 6·10민주항쟁까지의 민주화운동을 사건사 중심으로, 2권은 그 이후의 민주화운동을 각 부문 운동별로 나누어 정리하였음.

#### (3) 민주화운동 관련 조례 제정

##### ① 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 1996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부산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민주주의 표상 공간 조성을 결의하고, 부산광역시와 ‘부산 민주공원 조성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음. 추진위원회는 1997년 10월 민주공원을 기공하고, 1999년 10월 16일 개관하였음.
- 민주공원 관련 부산시의회는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1999.12.2. 시행)을 공포하고, 민주공원의 관리 운영의 위탁, 수탁자 선정, 입장권, 이용시간, 시설 이용 등을 규정하였음.

- 조례는 수탁자의 선정은 공모에 의하고, 수탁자격은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민주화운동 사업실적이 있거나 민주공원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운영능력을 가진 비영리법인을 수탁자로 하였음.
- 민주공원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개관 이래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해 오고 있음.

②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2017.08.22.) 제정

- 부산에서 발생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6·10항쟁 등 오늘날 국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룩한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이 필요함을 인식.
-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발전 및 민주주의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함을 주장.
- 부산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정(10월 16일),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 설치,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③ 「부산광역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9.12.24.)

-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그 관련자와 유가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조례는 부산시가 부마민주항쟁 정신 계승과 관련자 예우를 위한 시책발굴과 시행을 의무화하고, 시민 또한 항쟁의 역사적 진실 규명에 노력하고,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였음.
- 부산시가 부마정신 계승 행사 개최,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심신 치유사업, 항쟁자료 수집 정리, 전시 출판 등의 학술문화사업, 항쟁 정신 계승 교육 홍보사업, 국제적인 교류협력사업, 추모사업, 관련 입법 촉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④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1.05.11.)

- 부산시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 공헌자 희생자와 그 유족을 예우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알리고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
- 부산시장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를 위한 지원 시책과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음.
- 내용은 위로금 지급, 장제비 지급, 심신 치유, 부산시 공공시설 이용 비용 감면, 부산시 주최 주관 박람회 및 행사 이용 등을 규정하였음.
-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2022년도 예산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위로금 지급 예산을 확보하고, 지급을 계획하였음.

<표 1> 부산시 민주화운동 관련 조례

	제목	내용
1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1999.12.02)	-민주공원의 관리 운영의 위탁, 수탁자 선정, 입장권, 이용시간, 시설 이용 등 규정 -수탁자의 선정방법, 자격 등을 규정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개관 이래 수탁받아 운영
2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2017.08.22)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발전 및 민주주의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기념일 지정(10월 16일),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 설치,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지원
3	부산광역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9.12.24.)	-부마민주항쟁 정신 계승을 위한 시와 시민의 책무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의 범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전부 혹은 일부 지원
4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05.11.)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시책 마련 등 시장의 책무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 유족에 대한 예우, 위로금, 장제비 지급 등

#### (4) 시사점

- 부산시 민주화운동 지원 정책은 타시도와 비교하면 선진적이라 평가 가능함. 1999년 민주공원 설치와 이를 통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 수행되었고, 이와 관련한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2022년 5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위로금 보편 지급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될 계획임.
- 반면 민주화운동 관련 예산이 국비지원에 비교하면 아주 적어,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문화사업 예산 증액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 민주화운동 담당 부서 및 실행 기관의 단일화가 필요함. 현재 부산시의 담당 부서는 양분되어 있음.
- 부마항쟁과 6월항쟁 관련은 인권노동정책담당관이 담당하는데, 여기서는 부마민주항쟁기념식 개최,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위원회 운영, 부산민주공원 운영,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음.
- 행정자치국 총무과 보훈지원팀은 보훈 관련 기념행사와 대상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4.19혁명 관련 기념행사 및 보훈대상자 관리를 담

당하고 있음.

- 민주화운동 실행기구로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업무를 부산시 전체 민주화운동과 연결해 진행할 필요가 있음.

## 2) 중앙정부 민주화운동 기념정책

### (1) 중앙정부(보훈처, 행정안전부) 제정 법률

<표 2> 중앙정부의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 제정

	제정일자	주요 내용	소관부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990.08.06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복직, 보상금, 의료지원, 생활지원 등)	행정안전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1995.12.21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 전 후하여 발생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 효 정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 받은 경우 특 별재심 가능 -기념사업, 5·18민주화운동 진압 공로로 받은 상훈 환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국방부 법무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 에 관한 법률	2000.01.12	-민주화운동 관련해 희생자, 그 유족에 대한 국 가의 명예회복 및 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구성(특별사면·복권, 복직, 생활지원, 의료지원, 기념사업 추진, 추모단체 지원 등)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2001.07.2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설립하고, 민주화운동 을 기념하고 정신 계승 사업 수행	행정안전부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02.01.26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예우 -적용대상자,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예우(교육, 취업, 의료, 대부, 단체설립, 기념 추모사업)	국가보훈처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2018.03.13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권력에 의한 반 민주, 반인권적 행위를 조사, 진실 규명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치 운 영(진상규명조사, 유해 조사·발굴, 청문회)	5·18민주화운 동진상규명조 사위원회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2020.06.09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 관련자와 유족에 대	행정안전부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한 명예회복, 보상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 의위원회 구성 -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 지원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2021.07.20	-3.15의거 진상규명, 참여자 명예회복 -기념사업, 재정지원	행정안전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1973.03.30	4.19혁명 기념행사	국가보훈처
	1997.05.09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국가보훈처
	2008.02.29	6·10 민주항쟁 기념행사	행정안전부
	2010.03.12	3.15의거 기념행사	국가보훈처
	2018.02.06	2.28민주운동 기념행사	국가보훈처
	2018.11.02	3.8민주의거 기념행사	국가보훈처
	2019.09.17	부마민주항쟁 기념행사	행정안전부

## (2) 중앙정부 민주화운동 정책의 시사점

- 중앙정부의 민주화운동 관련은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왔음.
- 국가보훈처는 국가 유공자 지원이 중심이어서,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지원은 빈약하였음. 이 기관은 1973년 4.19혁명을 시작으로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3.15의거,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부마민주항쟁 등의 기념행사 진행을 담당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1995.12.21.)을 비롯해 5.18민주화운동,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등 주요 민주항쟁의 진상규명, 관련자 명예회복, 예우, 보상 등에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1996년 거창사건 등 처리지원단 발족을 시작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지원,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 제주4.3사건 처리, 노근리·거창사건 등 처리, 민주화운동 보상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을 설치하여 관련 사건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회복, 보상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민주화운동 보상 관련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1.01.12. 공포)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2001.07.24.)을 제정해 민주화운동 보상지원단을 구성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만들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기획 추진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기념관건립사업, 기념사업, 교육사업, 사료관, 연구사업, 국제협력사업 등을 통해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지향점 제시하였음.



<그림 4>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 홈페이지

### 3)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정책

#### (1) 광주광역시 제정 조례

<표 3>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 조례

	시행일시	주요 내용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기본재산 지원 조례	2008.10.31	-5·18기념재단 지원을 목적 -재정지원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10.05.03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설치와 운영 규정 -시설의 이용 및 관리 -시설의 위탁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2011.07.01	-5·18유공자와 유가족 생활 지원을 목적 -지원대상, 지급액 및 지급기준, 지급신청, 절차 등을 규정
광주광역시 5·18사적지 보존·관리 및 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2011.07.27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적지와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복원 및 활용위해 제정 -5·18사적지 보존위원회 설치 -사적지 지정, 보존·관리·복원, 순례프로그램 개발
광주광역시 5·18정신 국제화 실천활동 지원 조례	2013.01.01	-5·18민주화운동의 인권·평화·나눔 정신을 국제사회에서 실천하는 활동에 대한 지원

광주광역시 5·18 기념문화센터 운영 조례	2013.07.01	-5·18기념문화센터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5·18기념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시설의 사용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 조례	2013.07.11	-5·18기념사업위원회 설치 -5·18기념사업 지원(진실규명, 역사적 원형 보존관리, 추모사업 및 관련자 치유, 기념공간 조성 및 보존관리)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관리 운영 조례	2015.12.28.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보전 전시에 필요한 사항 -기록관 관리 및 운영 -기록물의 수집 및 보존
광주광역시 5·18민주광장 운영 조례	2018.01.01	-5·18민주광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광장의 사용 승인, 광장 사용자 준수사항, 손해배상, 철거 조치
광주광역시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기념관 건립 및 운영 조례	2019.01.01	-민족 민주열사 추모 및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기념관 건립 및 운영 -기념관 건립(망월묘지공원) 및 운영, 기념관운영위원회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의 조기(弔旗)게양 조례	2013.10.01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 정신 선양을 위해 기념기간 등 국기 조기게양 사항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2020.05.08	-광주광역시민 모두가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시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하며, 5·18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전승 실천하여 민주 인권 평화 도시 조성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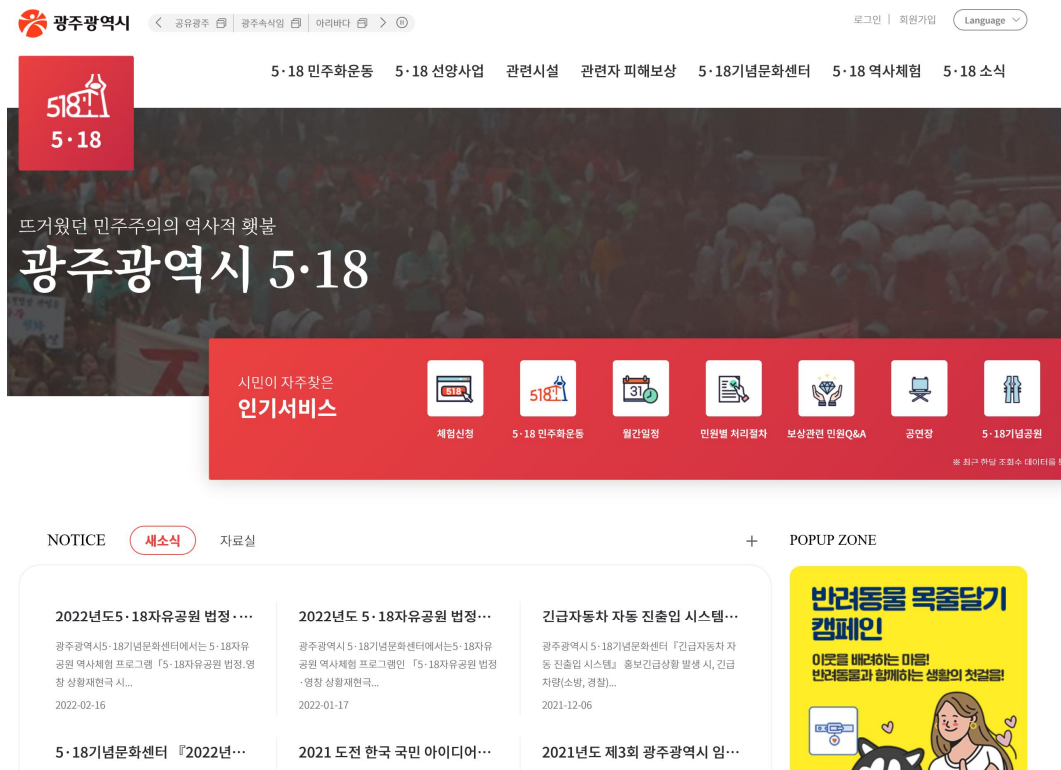
## ② 광주광역시는 민주인권평화국 5.18선양과의 5.18정신계승 및 선양 사업

<표 4> 광주광역시 5.18정신계승 및 선양 사업

항목	주요 내용
기념	5.18기념행사, 5.18기념재단 협조지원 및 보조금 관리, 5.18기념사업회 운영, 5.18민주화운동 가상박물관 구축사업,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사업 추진, 국군광주병원사적지 원형복원 추진, 사적지 관리, 5.18민주광장 운영
추모	5.18지방 공휴일 관리업무, 5.18구묘지추모관 건립
희생자/유족 지원	5월 3단체 협조, 지원 및 보조금 관리, 오월어머니집 협조지원 및 보조금 관리,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추진, 5.18구묘지 안장심의 운영, 5.18보상업무, 유공자 생활지원금, 의료지원, 피해자 실태조사
조사, 연구	5.18연구지원사업(전남대 산학협력단), 5.18관련 심사자료 및 기록물관리
교육	역사체험 배움공간 조성사업 추진, 5.18민주화운동 교육관 운영
기타	5.18왜곡대응 업무 전반,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활동 지원

자료: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 홈페이지 운영: 광주광역시 ‘분야별정보’란에 5·18항목을 따로 편성해 독립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음(아래 그림 참조). 5.18선양사업, 관련시설, 관련자 피해보상, 5.18기념문화센터, 5.18역사체험, 5.18소식 등의 항목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 5.18기념재단 운영 지원. 광주광역시보조금 500,000,000원, 광주시마라톤 보조금 27,000,000원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림 5> 광주광역시 5.18 관련 홈페이지

### 3. 평가지표

#### 1) 목적

-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함.
-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과제 도출을 가능하게 함.
-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구성원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음.
- 사업의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함.
- 효율적인 자원배분, 사업기획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

#### 2) 방법

- 평가 시기는 정기적이어야 함.
- 평가는 사업에 관계있는 다양한 부류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3) 평가지표별 세부 평가방법

<표 5> 평가지표별 세부 평가방법

지표	세부 추진과제	평가방법
위탁 기관	인적자원의 적정성, 전문성	-상근자 수 및 예산 -민주화운동 관련 전문성
	자생력 확보를 위한 재정확보 노력	-재정확보 노력
	민주화운동 관련 제도적 노력	-조례 제·개정 노력
기념 추모 치유	합동추모제	-참가자(단체) 수 -전년도 대비 증감율
	열사 기념 영상 및 출판물 제작	-제작 건수 -소비자 반응
	문화행사 기획 전문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횟수, 참가자 수 -양성 전문인력의 기여도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건수 -참가자 수
	치유 프로그램 운영	-치유 프로그램 운영 여부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 수
	치유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및 예산 편성	-예산 편성 규모 및 전년도 대비 증감율 -참가 전문인력 수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추진	-추진 내용
연구 및 자료	역사현장 발굴, 보존, 활용	-발굴 건수 -보존 시스템 운영 여부 -발굴 역사현장 활용 내용

조사	역사보존검토위원회 운영	-역사보존검토위원회 구성 여부 -위원회 개최 횟수
	민주화운동 자료 조사	-자료 조사 건수
	민주화운동 연구 사업(학술발표회 개최, 연구총서 및 학술지 등 간행)	-학술발표회 개최 수, 참여자 수 -간행물 발간 건수 및 배포 수
	민주화운동 자료 체계화 및 목록화	-체계화 및 목록화 건수
	연구인력 확보	-연구인력 수
교류협력	국내외 기관과 연대	-참여 기관, 단체 수 -사업 내용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참여 기관, 단체 수 -사업 내용
	해외 기관 단체, 연기구관과 연대	-참여 기관, 단체 수 -사업 내용
교육	초중고 민주시민교육	-교육 횟수 -참가자 수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양성 해설사 수 -해설사 운영 실태
	지역대학 교과목 운영 지원	-개설 강좌 수 -수강 인원 -수강생 반응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 단체, 동아리 지원	-지원 대상 기관 및 단체 수 -지원 규모 -지원 파급효과
	민주화운동 조사 자료를 활용한 스토리 개발	-개발 건수 -보급 내용
	교사, 공무원, 기업 등 연수교육 운영	-운영 건수
	비대면 콘텐츠 개발 운영	-비대면 콘텐츠 개발 건수 -콘텐츠 활용도
	민주화운동 가치 교육	-교육 횟수 -참가자 수 -수강생 반응
홍보	홈페이지 운영	-홈페이지 운영여부 -홈페이지 접속자 수 -접속자 반응
	민주화운동 홍보단 운영	-홍보단 구성인원 수 -홍보단 활동 내역
	지역사회(경제)와 상생을 통한 굿즈 개발	-개발 건수 -소비자 반응

### Ⅲ. 부산 민주화운동 개요 및 개념 정의

#### 1. 부산 민주화운동 개요

『부산민주운동사』에 따른 시기 구분

전사 : 개항 이후~일제강점기

해방~1950년대 부산 : 분단국가의 수립과 민주세력의 억압

4.19혁명과 1960년대 민주화운동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1980년대 민주화운동과 6.10민주항쟁

부문별 운동 : 민주화운동의 새로운 과제와 시민운동의 확장,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기의 민주화운동, 역진적 민주화 시기의 민주화운동

한국 민주화운동의 흐름 속에서 부산에서는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운동이 끊임없이 전개되었음. 오늘날 민주주의가 실현되기까지 한국사회는 험난하고 굴곡진 역사를 경험하였음. 그 역사적 여정의 일익을 담당해온 부산의 지역사에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보편성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부산의 지역적 특수성이 관통하고 있으며 지역적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부산민주운동사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관건임.

부산은 태평양을 등진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으로서 지정학적 요충지로 개항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국제무역항으로서 빠르게 성장하였음. 1876년 일본의 강압으로 조선 최초의 개항장이 된 부산은 일본거류지를 중심으로 근대도시로 성장. 일제강점기에는 인구 면에서 서울 다음으로 평양과 2, 3위를 다투는 대도시로 발전함. 이렇게 성장한 부산은 식민지 모순의 결절점이자 일제의 대륙침략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식민지적 모순에 대한 저항운동으로서 항일민족운동이 전시기에 걸쳐 발생함.

해방이 되자 부산의 일본인들이 떠난 자리를 귀환 해외동포들이 채워가면서 인구가 증가하였고, 해방 직후 경제적 어려움은 그동안 누적된 도시의 여러 모순들을 증폭시킴. 그러한 가운데 1946년 미군정 하에서 이른바 ‘10월 항쟁’이 발생. 10월 1일 대구에서 일어난 시위로 시작되어 2개월간 걸쳐 진행된 미군정 반대 항의 시위는 수많은 인명 피해 끝에 강제 진압됨. 부산에서도 철도노동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이 항의 시위에 참여함.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한국 정부는 수도를 부산으로 이전함. 그 해 8월 18

일부러 이후 약 3년간 부산은 대한민국의 임시수도로 기능함. 이 기간 중에 피란민의 대거 유입으로 부산의 인구는 크게 늘어났고, 전쟁기간 동안 임시수도로서의 행정과 정치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원조 등으로 인한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부산의 도시 기능은 더욱 확대되어 감. 부산의 인구 증가와 도시의 확대는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국제도시로의 개방성과 결합하여 근대적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의 형성에 크게 기여함. 그러나 전쟁의 여파로 1950년대 실업이 만연하였고, 이승만 정부의 독재와 부패는 더욱 심해졌음.

1960년 4월 마침내 4·19혁명 발생. 4·19혁명은 이승만 정부가 저지른 3·15 부정선거에 대한 마산 시민들의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중요한 계기로 작용함. 이렇게 시작된 반이승만독재투쟁은 마산과 이웃한 부산에서도 강력하게 전개됨. 4·19혁명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혁명은 무산되었고, 이후 박정희 군부정권의 독재가 시작되었음. 박정희 정권은 1972년 유신을 선포하고 유례없는 철권통치를 시행하였음.

유신체제 하에서 유신정부에 저항하는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가장 강력한 투쟁은 부산에서 발생함. 부산시민들은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을 촉발시켜 마산시민들과 함께 유신체제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함. 부마민주항쟁이 뿌린 항쟁의 씨앗은 광주민주화운동을 거쳐 6.10민주항쟁으로 결실을 맺음. 이 시기의 부산지역 민주화운동은 1990년대 시민운동의 자양분이 되어 1987년 민주화 이후 지역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민주화 이후 민주화운동은 ‘실질적 민주화’, 즉 사회적 경제적 민주화의 추진이 핵심 과제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이며, 민주화가 진전되어 정의롭고 공정한 시민사회로 발전해 나아가는 과정임. 이 단계에서 민주화는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수자 중심의 특권과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는 생활의 민주화운동으로 진화 발전해 나가며, 그 핵심적 과제 중 하나로 대두된 것이 재벌체제를 개혁하고 노사관계를 개선하며 사회복지의 확충을 목표로 하는 경제민주화임. 경제민주화와 동시에 민주적 규범과 가치의 정착(내면화)을 둘러싼 시민사회 내부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해야 함. 이는 곧 사회민주화의 과정이며 그 목표는 인권과 시민권의 보장 및 확장, 민주주의 문화적 규범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임.

## 1) 시대별 민주화운동의 특징

### (1) 해방~1950년대 부산 : 분단국가의 수립과 민주세력의 억압

해방 이후 남북한에 체제가 다른 두 개의 정권이 들어섬.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고 이데올로기 대립 격화됨. 남북간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제1공화국의 이승만 정권은 반공정책을 앞세워 독재정치를 강화하였고, 민족의 분단 현



실을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

1950년대에는 생산현장에서도 반이승만 분위기가 강했음. 국내 최대 방직공장이면서 한국전쟁 때 군납으로 많은 이익을 내고 있던 조선방직 불하를 둘러싼 대립 격화. 조선방직 불하는 당시 부산의 정치인이자 경제인이었던 김지태를 비롯한 지역 경제인들이 유력했지만, 이승만정권은 소위 ‘조방낙면사건’을 빌미로 부산 경제인들을 불하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승만과 인척관계로 알려진 강일매에게 불하함. 조선방직의 강일매 불하와 강일매의 반노동정책에 대응한 조선방직 파업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음. 1952년 부산 부두노동자의 파업으로, 미군 하역작업 계약 갱신 관련한 파업, 1954년에도 부산 미군부대 한국인 종업원들이 파업을 일으킴.

## (2) 4·19혁명과 1960년대 민주화운동

4·19혁명은 직접적으로는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대한 불만과 특혜와 부패로 유착된 정치권력과 자본가를 한 축으로 하고, 열악한 경제 환경 속에서 삶을 지탱해야 했던 기층 민중을 또 다른 한 축으로 하는 양자 간에 형성된 대립 구도 속에서 발생. 부산에서도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 관련선거가 심각하게 이루어졌고, 1950년대 부산의 경제는 귀속사업의 부적절한 관리, 한국전쟁기 전시특수와 피란민 유입으로 인한 시장 확대, 전쟁 후 임시수도로서 정부가 창출했던 수요의 소멸로 침체기에 접어듦.

1960년 4·19혁명은 1950년대를 통하여 억압당했던 민주화 요구와 힘이 분출한 사건이었음. 3월, 4월의 반독재 투쟁 과정에서 부산 시내 고등학교 가운데 한 번이라도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가 없을 정도로 고등학생들의 저항은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음. 학생들은 처음에는 개별 학교 단위로 시위를 기도했지만, 점차 다른 학교와 연계를 강화하여 연합시위 형태로 발전해 나감.

나아가 이승만 퇴진 이후 부산지역의 고등학생들은 본격화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학내의 비민주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학원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고, 장면정권 아래에서 지역사회의 진보적 양심세력이 전개하는 통일운동을 비롯한 각종 사회운동에 대한 지원 활동을 벌이기도 함.

부산지역의 4·19혁명은 점차 학생시위에서 민중시위 형태로 전환됨. 4·19혁명은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발전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도 활발하게 이루어짐. 대학교수단부터 노인과 부녀자뿐만 아니라 구두담이, 전차표 파는 사람, 음식점 종업원, 텃밭주이, 옛장수 등이 참여하였음. 시민들의 정권에 대한 불만과 저항정신은 학생시위와 유연하게 결합하면서 시위의 규모와 효과를 증폭시킴. 특히 도시 빈민의 참여는 조직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항구도시 부산의 경제적, 도시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었음.

4·19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화가 추진되었음. 학생들의 학내 민주화 운동과 더불어 교사들의 민주화 운동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1960년 5월 1천여 명의 교사를 중심으로 부산지구 교원노동조합이 결성됨. 부산시 교원노조는 ‘반민주 교육행정가’를 규탄하고 교육의 민주화와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음. 4·19혁명은 노동자들의 노동운동도 추동하였음. 특히 부두노조는 1954년부터 비리와 폭력의 온상이었던 부산 부두노조위원장 김기옥의 퇴진운동을 추진하였음.

부산지역에서 4·19혁명은 통일운동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어감. 부산의 4·19혁명은 3, 4월 이후의 민주화 자주화운동으로 발전했고, 이 과정에서 민민청이라는 청년조직과 학생조직, 그리고 혁신정당 및 사회단체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민주화 자주화 운동을 이끌었는데, 이러한 과정은 이승만 퇴진과 7.29 총선을 맞으면서 민주화 투쟁의 소강상태를 보였던 서울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었음. 산수 이종률과 그의 제자들은 민민청을 중심으로 통일운동을 전개함. 1961년 전국조직으로 민자통이 결성되었고, 민자통은 부산의 혁신계 정당, 민민청, 학생, 노동자 등과 연대해 장면정권이 추진하던 ‘한미경제협정’과 ‘2대 악법’ 반대투쟁을 추진하였음.

5.16 군사쿠데타 이후 민주화운동의 성과가 부정되면서 부산 지역내 4·19혁명 직후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민민청, 민자통 등 지역 내 진보적인 인사들에 의한 재야활동이 거의 사라지고, 고등학생들의 활동도 위축됨. 그 가운데 민주화운동의 중심이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옮겨갔고, 이들은 한일회담 반대시위를 주도해 나감. 1964년 3월 25일 부산지역 학생들은 교내에서 결의문 낭독 후 거리행진을 주도했으며, 이후 시위가 장기화되자 학생들의 요구사항은 한일회담에만 머무르지 않고 부정부패 일소, 학원사찰 중지, 나아가 반인권적인 정부의 대응 비난, 박정희 정권 타도로 확대되었음.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을 반대하여 1967년 6·8부정선거 규탄과 3선개헌 반대 투쟁이 발생함.

### (3)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1970년대 초반 박정희 정권의 독재가 강화되고 불균등 성장정책의 모순이 드러나면서 민주 대 반민주의 대립구도가 가시화되었고, 각 부문 운동이 초보적이거나 조직적 형태를 갖추기 시작함. 부산도 전국적 운동의 발전과 궤를 같이하는 가운데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이 주된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음.

부산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생운동 조직인 한열을 결성하여 학생운동의 당위성, 교련문제, 통일문제와 관련한 활동을 하였고, 전국적 연대 위에서 부산지역 대학생들은 교련반대 투쟁 전개. 이후 교련반대를 넘어 부정부패 규탄, 중앙정보부 철폐, 민중의 생존권 보장 등으로 확대해 나감.

박정희 정권의 권위주의적인 노동정책 아래 부산에서 발생한 노동운동은 대부분 임금인상,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었음. 1970년 삼양수산 소속 북양출어 선원 1000여 명이 체불임금 지급 요구, 1970년 11월 동래구 반여동 경남섬유공업사 종업원들의 체불임금 지급 농성, 1970년 12월 동래구 명륜동 대림합섬공업주식회사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지급 요구, 1971년 임금인상 체불임금 지급 외에도 부당노동행위와 인턴, 레지던트의 파업, 1971년 3월 한국 비닐론 남녀 종업원의 시위, 1971년 6월 전국적 수련의 파동으로 부산의대 부속병원 인턴들의 시한부 단식농성, 1972년 노조결성을 방해한 한일제관 사건 등 노동운동이 발생함.

1972년 박정희 정권의 10월 유신과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으로의 전환으로 민중의 민주화 열망과 생존권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됨. 박정희 정권 이래 부산지역 내 진보 정치세력 사실상 부재했음. 그러나 부산은 4.19혁명 당시 치열한 투쟁을 벌였던 지역이었으며, 1990년대까지 군부정권에 반대하는 야당도시라는 역사성을 가진 도시였음. 부산에서 재야세력이 형성된 시점은 1972년 10월 유신체제 이후인데, 최성묵으로 대표되는 개신교계 인사, 송기인으로 대표되는 가톨릭계 인사, 김광일, 이흥록의 법조인 등이 본격적인 모임을 갖고 운동에 나서는 시기는 1974~1975년 무렵으로 이들 중 신구교의 기독교 재야세력이 힘을 합쳐 조직한 최초의 단체는 1975년 정의구현기독교자회였으며, 1976년 확대되어 부산인권선교협의회가 창립됨.

이 시기에 재야세력이 가세한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조직은 1974년 12월 결성된 민주회복국민회의로, 다양한 반유신운동의 흐름을 수렴하여 윤형중 신부를 상임대표로 하여 재야와 야당이 함께 구성한 범국민적 기구임. 1975년 3월 초까지 7개 시도지부와 20개 시군지부 결성, 1975년 연초부터 기자회견, 강연회 등을 통해 반유신 민주화의 정당성을 대중에게 전파하였고, 부산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민주회복국민회의 부산경남지부가 결성됨.

1976년 2월 중부교회 대학생 회원들이 체포된 책방골목사건이 발생하여 재야세력들은 구속된 학생들을 지원하였고, 1977년 부산도시산업선교회가 조직되어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대한 문제제기, 사례발표를 겸한 노동문제를 주제로 한 기도회, 노동자에 대한 교육 등을 중부교회, 엠네스티, YMCA 등 다른 단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활동을 강화해 나감.

1978년부터 부산민주화운동에 중요한 변화 시작. 중부교회를 중심으로 한 양서협동조합 창립과 학생운동이 새롭게 조직화됨. 양서협동조합은 재야인사나 지식인 단체에 비해 폭넓은 대중의 참여가 가능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의 확산에 기여하였고, 지역 사회운동을 주도한 사람을 양성하고 상호교류를 통해 연대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감.

1978년 4월 부대자율화민주실천선언서사건, 7월에 부산대폐인팅사건 발생. 5월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이 부산에서 구속, 재판을 받는 분위기 속에서 1978년 조직적 학생운동을 위한 비합법 지하서클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있었음. 학교 동아리에서도 인문사회과학 서적 학습이 확산됨. 대학생들이 야학을 설립하거나 교사로 참여. 노동야학이 활성화되어 1977년 성안야학(최초의 노동야학), 1979년 밀알야학, 청야야학, 상야학이 설립되었음.

1979년 9월 박정희 대통령 하야,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면서 부산공업전문대학에서 시위 발생. 1979년 10월 유신체제의 폭압성과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모순을 비판하며 자립경제, 공평한 분배를 요구하면서 부마항쟁이 발생함. 부마항쟁은 도시빈민 중심의 기층민중이 위주가 되고 학생 및 중간층 시민들이 가세한 형태의 민중적 항쟁이었음.

#### (4) 1980년대 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

박정희 정권의 몰락 이후 군부독재의 종식과 민주화의 완전한 실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옴. 부산지역에서도 학교와 공장을 중심으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분출됨. 부산 대학가에서는 학도호국단철폐와 민주총학생회 건설과 같은 학내 민주화 이슈와 계엄철폐, 노동삼권보장 등과 같은 사회민주화 요구도 표출.

권력을 잡은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은 정권 초기 통치기반을 다지기 위해 정지작업 시작함. 부산지역 민주화 세력을 탄압할 목적으로 부림사건 조작,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비판하면서 일으킨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이 발생함. 1980년대 초 여러 가지 탄압을 받으면서도 부산의 사회운동 단체 출현과 활동이 활기를 띠. 환경 인권문제를 다루면서 대중성을 확보해 나감.

1982년 8월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부산지구협의회 결성. 부림사건과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이후 많은 양심수들 지원하였고, 1984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지역조직으로 부산인권위원회 조직, 구속자를 위한 기도회 예배 같은 종교활동 및 인권탄압 사건에 대한 일상적 지원 법률구조활동 실시함. 이후 공해문제연구소 부산지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부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민가협) 등 사회단체 조직됨.

1980년대 초 부산지역 학생운동은 총학생회 부활이라는 학원자율화의 핵심과제에 주력하는 한편, 활동가 중심의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조직을 해체하며 광범위한 학생 참여를 이끌어 냄. 1983년 부산 대학가에서 군부독재 타도, 학원자율화 민주화, 총학생회 부활을 요구하는 운동 전개하였고, 1985년 전국 총학생회 재건 분위기에 맞추어 부산에서도 총학생회 재건운동을 전개해 나감.

1960년~70년대 경공업 중심의 부산 노동현장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이었음. 정부의 탄압으로 노동운동 위축, 노동운동을 지원해 줄 재야단체 학생운동세력 부진. 1984년경 노학연계 전략에 따라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노동현장에 투신, 부산의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1984년 태화고무 노동자들의 공장폐쇄 항의 농성, 동양종합아파트 공사장 인부들의 항의농성, 택시기사 투쟁 등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됨.

#### (5) 전두환 정권기 반독재 민주화운동

1985년 전두환 정권의 유화국면 속에서 부산의 민주화운동은 반독재투쟁에 돌입함. 공개사회단체 조직을 통한 재야운동을 비롯해서 학생운동, 노동운동, 문화운동의 부문운동이 활성화되었고, 재야운동과 청년운동의 연대가 이루어짐.

이 시기 학내민주화와 사회민주화 투쟁이 활발하였고, 노동자 생존권 투쟁이 확산되었음. 1985년 부산의 노동운동은 민주노조 건설투쟁, 근로기준법 준수 투쟁, 일상적인 생존권 획득 투쟁 등을 전개하면서 보다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투쟁 전개. 세화상사 노동자 투쟁, 연합철강 노동자 농성, 동양고무 임금인상 투쟁 등은 대표적인 사례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으로 부산에서도 부민협, 부산EYC, 부산사선, 천주교정의구현부산교구사제단, 부산민가협 등 재야단체와 신민당이 2월 7일 추도대회 개최, 민주쟁취 독재타도, 고문정권 타도를 외치면서 시위를 전개해 나감.

4.13호헌조치, 각종 정부기구를 통한 호헌지지 유도 공작, 언론의 호헌미화 기사에도 불구하고 4.13호헌조치는 거센 반대여론에 부딪힘.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 부산본부 결성. 부산지역 총학생회협의회가 결성됨.

박종철 군 고문살인 은폐규탄 및 호헌철폐 부산시민대회 (6.10부산시민대회) 개최와 동시 다발성 기동성 시위 전개, 6.10범국민대회 보고대회와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학생 시민들의 시위가 확산되어감. 6월 16일 가톨릭센터 농성으로 6.10민주항쟁 재점화, 가톨릭센터 농성 지지투쟁을 중심으로 시위역량 결집. 명동성당 농성 해산 이후 전국적으로 투쟁의 열기가 조금씩 식어갈 때 부산에서는 오히려 대규모의 대중항쟁으로 확산되어감. 6월 18일 국민운동본부가 정한 최루탄추방 국민결의의 날에는 시민봉기에 가까운 양상이 나타남. 대학생, 사상공단 노동자 및 시민이 가세하여 시위 확산. 사무직 노동자 이태춘의 죽음으로 시위 격렬해짐. 6.26평화대행진. 독재타도, 민주헌법쟁취, 직선제쟁취를 외치며 시위 전개. 6.29 민주화선언, 선언 이후에도 부산국본에서는 군부독재정권 즉각 퇴진, 양심수 석방, 노동 3권보장, 민족통일 등을 결의, 이후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짐.

부산노동자투쟁위원회 결성, 부산노동자협의회 결성, 7월 22일 태광산업 여성노동자투쟁 9월 풍영, 국제상사, 부영, 삼화고무, 대양고무 등 6개 회사 18명 노동자의 가톨릭센터 농성 등 363건의 노동자 투쟁 전개함.

1990년대는 군부정권을 계승한 노태우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이어 3당합당의 결과 보수세력의 집권이 계속되었지만 한편으로 1987년 6.10민주항쟁을 통해 쟁취한 제도적 민주주의가 자리잡아 가는 시기였음. 한편 지방화시대의 개막은 지역적 차원에서 지방분권의 문제를 비롯하여 환경, 노동 등 각 분야에 새로운 이슈를 등장시켰고, 실질적 민주주의 요구에 따라 경제, 여성, 인권 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고조되어 감.

## 2) 부문별 운동

### (1) 노동운동

6.10항쟁을 계기로 한국 민주화운동의 핵심적 주체 역량으로 발전한 노동운동 세력은 민주노조의 기틀을 다지고 단위 노조의 역량 강화를 통해 노조간 연대운동을 강화해 나감. 부산에서도 1988년 노조탄압 저지 및 임금인상 완전 쟁취를 위한 부산 양산 김해지역 공동대책협의회, 지역별 노조협의회인 부산지역 노동조합총연합을 결성함.

이에 앞서 1987년 11월에 설립된 부노협은 노동조합 결성 및 운영에 대한 상담과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노동운동세력과 민주세력의 투쟁 지원. 부노협 해체 이후 부산노동자연합의 지원활동이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노동단체협의회 설립함.

1990년 1월 전노협 출범과 함께 한국 노동운동은 기업별 노조체제를 타파하고 자주적인 산별노조의 전국 중앙조직을 건설함. 부산에서도 부산노련과 전교조 부산지부, 병원노련 부산지부, 화물운송 관련, 항만하역노조연합회, 언론노련 산하 부산지역 언론노조 등 6개 노조단체와 부산노동자연합, 부산노동단체협의회 등 2개 운동단체가 부산 공대위를 구성하고 노동법 개정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1995년 민주노총 출범 이후 1996년 민주노총 부산양산지역 본부가 창립되어 노동법 개정과 복수노조 금지 철폐, 공무원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 법 개정을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하는 등 한국 사회운동의 중심으로 자리잡아 감.

### (2) 학생운동

1987년 이후 학생운동은 방향을 학원자주화와 학원민주화 등 학내 문제로 관심을 돌리면서도 군부정권을 계승한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정치투쟁 지속. 1980년대 공권력의 폭력적 탄압에 대한 학생운동 세력의 대응과정에서 나타났던 최루탄과 화염병 공방은 노태우 정부에서도 계속되었고, 부산에서 동의대 사건 발생함.

동구 사회주의권 몰락,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성장으로 전투적 학생운동은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했고, 내부적으로도 1994년 학과제 폐지와 학부제 시행, 1996년 연세대 사태를 거치면서 학생운동권 분열 가속화됨.

1997년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지정되면서 학생운동은 쇠퇴함. 폭력투쟁 일변도의 관성적 운동방식을 고수함으로써 대중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했고, 운동권 내부에서도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이라는 비판 제기. 부산에서도 부경총련 소속 대학생들은 노학연대를 모색하며 노동법 철회 집회를 열기도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한총련 탈퇴가 잇따름.

### (3) 교육운동

전교협 결성에 발맞추어 부산에서도 1987년 9월 부산교협 창립, 11월 사학중심의 부산평교사회연합회 창립. 부산에서 사학비리가 터져나오자 학교정상화를 위한 교사들의 활동이 전개되어 1989년 5월 전교협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창립됨. 1989년 6월 부산지부 결성함.

전교조 등 진보적 교육단체들은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안을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에 입각한 교육시장화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대안으로 단위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자율성 확대를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주장. 부산에서도 1996년 6월 전국 최초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협의회가 발족함.

1986년 고려대 교수의 시국성명을 계기로 부산경남지역 교수 40명의 시국선언이 이어졌고, 결과 1987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이 발족. 1988년 10월 부산경남 민교협 창립됨.

부산 민교협 소속 교수들은 총장직선제 추진 등 학원 민주화와 교수들의 교권확립을 위한 활동 전개. 대외적으로 부산경남 민교협 소속 교수들은 전교조의 활동을 지지했고, 5.18 내란 주동자 불구속 기소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 등 민주화 이후 후속과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함.

### (4) 여성운동

부산지역 여성운동은 1970~80년대 사회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성문제를 사회변혁 운동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고, 그 결과 1980년대 말 이후 진보적인 여성운동단체 출현. 민주 평등 평화를 모토로 민주사회 실현과 여성의 인간화를 실현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인권 및 노동 관련 활동, 페미니즘 확산을 위한 교육활동에 매진함.

1988년 1월 근로여성의 집이 결성되면서 여성단체가 설립되기 시작함. 1989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부산지역 탁아위원회, 부산환경운동연합 환경여성회 결성, 이듬해

부산여성회가 본격적인 활동 시작. 특히 부산여성회는 성폭력 운동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성폭력 상담 전화를 개통했으며, 1992년에는 부설기관으로 성폭력상담소를 개설. 1993년 이형자사건에 대응하여 다른 단체들과 통합하여 부산여성회라는 명칭으로 재창립.

1990년대 여성인권을 담당하는 조직들이 다수 설립. 1994년 부산여성의 전화가 개설되었고, 1995년 부산성폭력상담소 독립, 페미니즘 확산과 교육을 목적으로 1995년 부산여성사회교육원과 내일신문 여성문화센터가 설립.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1996년 부산보육교사회로 전화하고, 1998년 부산여성장애인연대가 설립됨.

여성들의 정치세력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도 설립됨. 1992년 여성정책연구소가 설립되었고, 이후 민주정부를 바라는 여성모임이 구성. 여성단체들의 정치교육활동 결과 1994년 부산시장 직속의 여성정책자문위원회가 만들어졌고, 1995년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부산지역 여성단체들이 망라하여 여성연대를 결성하여 비례대표직 시의원에 여성을 할당하여 줄 것을 촉구하기도 함.

1990년대 여성운동은 여성인권문제, 여성주의 확산 등이 주요 관심대상이었고, 이와 관련한 교육이 활성화되었음.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부산여성단체연합회 창립 등 여성운동의 확장과 새로운 여성단체의 설립으로 이어짐.

#### (5) 인권 소수자 운동

1990년대 부산의 인권운동은 양심수 석방, 고문반대, 국가보안법 및 사회안전법 철폐, 비전향 장기수 지원 등과 같은 시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정치적 자유권을 수호하는 운동으로 전개됨.

부산인권문화제 등과 같은 인권 문화 확산운동 전개. 그 과정에서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민가협 등 인권 관련 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연대함으로써 인권을 화두로 민주화운동 진영이 결집함.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늘어난 결혼이주여성, 산업연구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문화적 차별, 열악한 생활, 노동여건이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로 대두함.

1996년 부산지역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결성되어 다각적 지원과 법제도적 정비를 위한 활동 시작. 장애인 복지 확대, 인간권 권리 보장을 위한 움직임 전개.

#### (6) 시민사회운동

1990년대 민주화와 함께 지방화시대가 열리면서 지역 시민사회 운동단체들이 성장. 1980년대 말 부산지역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은 지방선거로 지역 수준에서 정치적 기호가 확장되면서 개별 혹은 단체간 연대를 통해 자기 역할을 정립해 나감.



부산지역 경제정의 및 공공선 실현을 목표로 내세운 부산경실련을 비롯하여 부산참여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민연련 등 활동을 시작.

1990년 초 창립된 부산지역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은 각자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지역 내 단체 간 연대에 기초한 연대체 운동도 시작. 1996년 1월 창립된 부산시민협은 연대체 운동의 결실을 봄.

부산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반신자유주의운동의 일환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반대투쟁, 하야리아부지 반환운동, 선거감시와 공정한 언론운동, 황령산 살리기 및 개발저지 운동 등을 전개. 특히 후자는 지역 언론이 선도적으로 의제화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풀뿌리 주민단체들이 결합하여 개발업체와 지방자치단체의 난개발계획을 저지한 성공사례가 됨.

부문별 시민사회운동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4.19혁명 이후 부산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기억투쟁도 활발히 전개. 1979년 부마민주항쟁을 주도한 사람들과 지역내 종교계 법조계 문화계 인사들이 항쟁 10주년을 맞아 1989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가 창립됨. 1997년 6.10민주항쟁 10주년을 맞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부마항쟁뿐만 아니라 4.19혁명 이후 부산에서 일어난 모든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단체로 거듭남. 부산지역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부산 시민이 보여준 민주적 시민정신과 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9년 부산민주공원이 완공됨.

## 2. 민주화운동의 정의

### 1) 제도화된 민주화운동의 개념

- 제도적으로 민주화운동이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2013년 5월 22일 개정)에 따르고 있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에는 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광주민주화운동 등이 추가되었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은 권위주의체제로부터 민주주의체제로의 이행을 지향하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함.

### 2) 민주화운동 개념의 확장

- 국가가 공식적으로 정의한 민주화운동의 정의가 민주화운동 관련 주요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한계가 있음.

- 인간의 기본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계급 계층에서 진행된 일상적인 반권위주의 항쟁도 포함되어야 함.
- 시대에 따라 요구와 과제가 달라 주요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라는 상황에서 개인의 기본권 회복의 기본과제가 민족해방운동이었고, 1948년-1987년 이전까지의 민주화운동은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형식적 절차적 제도적 비민주적 행위에 대응하는 반독재 민주화투쟁이 주요 과제였음. 1987년 제도적 민주화가 성취된 이후로는 민주주의의 내실화와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일상생활에서의 민주화가 주요 과제가 되었음. 이 시대의 민주화운동은 다층적이고, 복잡한 양상을 보임. 특히 사회집단의 권익 옹호로 이어질 수 있는 반차별 운동을 포함해야 함.
- 따라서 민주화운동에는 일제강점기 민족해방운동, 국가권력에 의한 학살/비인권 사건, 주요 민주화운동 이외의 기본권 회복을 위한 일상적 저항운동, 소수자 반차별 운동 등이 포함되어야 함.
- 2021년 재발간된 『부산민주운동사』에는 노동운동, 학생운동, 교육운동, 문화예술운동, 여성운동, 인권·소수자운동, 시민사회운동 등 인간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요소에 대한 투쟁을 포함하였음.

## IV.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과제 도출

### 1. 기념 및 희생자 추모

#### 1) 현황

- (1) 매년 4대 항쟁에 한정되고 반복된 기념 추모사업으로 시민들의 관심 참여 부족, 재정 부족, 기획력 및 전문성이 부족함.
- (2)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와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3)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 예우에 대해서도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함. 6월 항쟁 대표 유족들과 교류가 있는 상태임→희생자 유가족들의 국비, 시비 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와 민주유공자법 추진과 부산시 차원의 관리가 필요함.

#### 2) 기본계획

- (1) 민주화운동 범위 확장과 현재화-민주, 평화, 인권, 통일, 노동, 학생, 다문화, 반차별, 생태운동으로의 확장
- (2) 기념 및 추모사업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확대하여 전문성과 활성화 도모
- (3) 기념공간(민주공원)의 추모, 기념, 전시, 학습의 장으로 기능 향상 도모
- (4)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치유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여 피해자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치유 지향

#### 3) 추진내용

##### (1) 민주화운동의 범위 및 기념사업의 대상 확장

- ① 4대 항쟁에 편중되어 있는 민주화운동 범위를 민주, 평화, 인권, 통일, 노동, 학생, 다문화, 반차별, 생태 운동 등을 포함하는 “일상 속의 민주화”로 범위를 논의, 확장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이는 민주화운동 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세대간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의미와 성과를 확장시킬 수 있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2001.6.28.)은 민주화운동을 “2·28 대구민주화운동, 3·8 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시행령에는 이들 이외에 6·3 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반대운동, 광주민주화운동 등도 명시되어 있음.
-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이를 억압하려는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

혹은 성공한 민주화운동만이 아니라 민주화를 지향한 사회운동 일반, 대규모 시위만이 아니라 사회의 각 부문에서 민주화를 위해 이루어진 활동 모두가 민주화운동임.

- 기존의 피해자·희생자 중심, 선별적, 제한적 기념·계승에서 다수 참여자를 포괄하는 상시적이고, 체계적, 유연적, 참여적, 통합적, 미래지향적인 기념·계승으로 발전해야 함. 다양한 민주주의를 향한 실천, 촛불집회와 같은 전 국민적 참여에 의한 민주주의, 제도적 민주주의를 넘어선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등을 담을 수 있는 다층적, 다차원적 기념·계승으로 전환이 필요함.
- 다양한 부문별 사회운동, 즉 학생운동, 농민운동, 노동운동, 빈민운동, 여성운동, 청년운동, 시민운동, 다문화운동, 생태운동 등을 포함하여 민주화운동의 저변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민주화운동의 범주 확장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세대간 격차 해소, 관점을 달리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계 인사를 참여시켜 논란을 줄이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 필요.

## ②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민주화운동으로 시기나 범위 대상 확장

- 해방 후 항일운동가와 지역 활동가들의 신국가건설 참여 활발-신덕균, 최천택 등
- 한국전쟁 피란수도 시절 부산은 항일운동가들의 집합소-해외 전쟁지원 국민들과의 교류 경험은 민주화운동의 토대가 됨.
- 독립운동을 했던 인사들은 이후 민주화운동과 문화운동 등 지역에 기반한 다양한 활동 전개해 나감-양한나(부산YWCA), 장건상(제2대 국회의원), 최천택(혁신계, 정치활동), 한형석(부산문화극장, 자유아동극장, 부산민속보존협회) 등
-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지역 독립운동의 기반과 인물이 해방 이후 국가건설운동, 나아가 민주화운동의 토대가 됨. 따라서 양자 모두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독립운동의 연속선상에서 민주화운동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③ 기념 계승 단체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사업 진행

### (2) 다양하고 기획력 있는 기념 추모사업 실시 및 지원 확대

#### ① 민주화운동 관련 열사들의 합동 추모제 지원 강화

- 대규모 기념행사에 편중된 관행 탈피, 의례에서 벗어나 한국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축제’의 관점으로 접근해 나감으로써 세대간 인식차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참여공간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음.
- 합동추모제 지원 제도화 : 기존에 민간단체나 학교, 자치구별로 별도 진행하는 추모·기념사업을 부산시 차원에서 홍보하고 연대 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 비대면 온라인 추모, 기념사업 마련하여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추모 기념할 수 있는 분위기 마련. 릴레이 챌린지를 통한 기념 추모열기 고조

사례) 4.3평화재단과 5.18기념재단의 온라인 추모관 운영



<그림 6> 4.3평화재단 온라인 참배

<그림 7> 5.18기념재단 사이버 참배

② 열사 기념 영상 및 출판물 제작 지원

- 부산지역 민주열사들에 대한 기록과 추모 영상 제작 및 출판 활동 지원
- 4.3평화재단의 제주 4.3 평화문학상, 전국청소년 4.3 문예공모전, 4.3 학술공모사업, 제주 4.3의 노래와 같은 사업을 참고하여 부산지역 민주화 열사 출판물을 다양한 연령층이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제작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③ 기념 및 추모 관련 문화행사 기획단, 전문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구성

- 문화행사 기획단 및 전문인력 양성 : 문화예술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하여 기념, 추모 관련 행사를 기획하고, 직접 행사를 하는 전문인력 양성. 지역 대학, 동아리,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문화예술 인력풀을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문화행사 전문 인력풀 확보 및 지원
  - 전문가 인력풀 DB구축
  - 지역 대학, 문화예술인의 재능기부 시스템 구축
  - 타지역 문화 예술 인력과의 교류 및 공동 기획(행사) 논의


④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시민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추모 및 문화프로그램 개발
- 기념행사 기획단과 같이 시민들이 ‘함께’ 참여, 기획, 운영, 평가하는 순환구조의 발전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동반하는 문화행사, 문화운동으로 확장
- 우리가 만드는 민주화운동 추모 기념 관련 모토(가치, 지향성)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웹매거진 발간, 프로그램 공모, 개발비용 지원

- 시민참여형 공연의 지원 확대
- 시민참여형 구술 기록화 사업 : 시민이 구술 기록화 작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서적 경험을 통한 새로운 교육 기회가 될 수 있음. 지역에 대한 기억과 역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장 가능.

사례) 경기도 ‘오성마을 인물백과사전’ : 시민단체, 공공기관, 역사가, 사서, 학교 등 관계자들로 구성된 기획위원회-시민모집-오리엔테이션을 통한 시민과 기획위원회의 유대감 형성-참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구술채록 목적, 방법 등)-구술채록에 필요한 질문지 작성 및 면담실습-면담과정(녹음, 촬영 등)-녹취작업-시민들의 면담후기 작성, 공유의 과정을 거쳐 진행. 경기도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오성을 기억하다, 기록하다』 발간, 경기도 메모리라는 디지털 아카이브에 발간 책 전문 등록으로 확장.

프로그램 구성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통하는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의 눈으로 나와 마을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는 마을 인물 기록가’에서는 역사와 인터뷰 교육 후 오성면의 어르신을 만나 삶의 기억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p>&lt;그림 8&gt; 오성을 기억하다, 기록하다1</p>	 <p>&lt;그림 9&gt; 오성을 기억하다, 기록하다2</p>	 <p>&lt;그림 10&gt; 오성을 기억하다, 기록하다3</p>
---	---	--

- 지역의 대표적인 행사(부산국제영화제, 부산인디게임페스티벌, 지스타, 음악제)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개발
- 인디게임 페스티벌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게임과 민주화운동을 콜라보하여 민주화운동을 스토리텔링으로 하는 인디게임 개발

사례) 2019년 인디게임 페스티벌 : 독립운동,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여 부산근현대사 주제로 한 인디게임 제작



<그림 11> 인디게임페스티벌(게임X한국사)

- 지역 대표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개발
- 기념 관련 프로그램 전문가 활용비 지원

(3) 민주공원의 기념 전시 문화공간으로서의 위상 제고, 차별화 모색

- ① 한국-부산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민주화운동 기념 추모, 민주가치의 집합체로서의 민주공원으로서 위상 재정립
  - ② 연구자, 건축가, 큐레이터, 행정기관, 당사자 단체 등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주공원의 장기적인 역할 확장과 방향성, 공간 활용 방안 모색
  - ③ 기념 전시공간의 변화-사실 위주보다는 영상, 체험, 현재성, 미래가치에 중점을 둔 기념 전시공간(문화공간)
- 각종 문화 공연의 장 : 북카페(작은 도서관), 작은 음악회, 미술, 사진 전시,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문화공연 등을 장소 대관과 재정지원을 통해 상시적으로 개최. 문화공간화
  - 현재 전시 트렌드는 스마트 전시, 입체형 전시, 몰입형 전시, 미디어 전시, 온라인 전시 등으로 변모하므로 민주공원의 시설을 보완하여 전시와 공연기능을 강

화할 필요가 있음.

- 프로그램의 개발과 공연 기획력의 전문성 강화.

사례) 민주공원에서 진행한 공연 전시

 <p>&lt;그림 12&gt; 해보면 감동하리 4번지</p>	 <p>&lt;그림 13&gt; 생활예술 문화축전(청년예술제)</p>
 <p>&lt;그림 14&gt; 부산물고기,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p>	 <p>&lt;그림 15&gt; SEEDS(기획공연)</p>

- 웹전시의 활성화

(4) 치유프로그램 실시를 통한 치유환경 및 치유기회 확대

① 내실있는 치유프로그램 마련

- 민주화운동 유족 및 피해자들의 정보 추적 및 정기적인 업데이트



- 민주화운동 관련자 외에도 국가폭력 피해자(형제복지원, 부문별 운동의 피해자 등) 등에 대한 사회적 치유로 범위 확장.
- 민주화운동 및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치유를 위한 법적 근거 보완
- 유족 및 피해자들의 연령별, 증상별 프로그램 운영(신체치유, 마음치유, 공동체 치유 등)
- 유족들의 고령화에 따른 건강검진과 치매 치료 등 의료지원 체계 강화, 방문관리 실시
- 유족 및 피해자 맞춤형 복지프로그램-생활비, 진료비 등 예우 및 지원방안 확대 (각 구군청과 연계방안 모색)

## ②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및 예산 편성, 지원 확대

- 지역의 의료기관, 상담센터 등과 MOU를 체결하여 유족, 피해자들의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
- 치유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은 향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시 시범 운영의 모델로 연결될 수 있음.

## ③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조속한 건립

- 법률 제18542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1.12.7.) 제정
- 광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확정, 2023년 개원 예정
- 제주도는 2020년 4.3트라우마센터 개소, 운영 중. 문재인 대통령이 국립으로의 승격 지원을 약속. 제주도 차원에서도 국립으로의 승격하기 위한 행정력 집중
- 부산도 국립 트라우마센터의 건립을 위한 민관 합동의 운동 전개 : 5.18과 4.3의 트라우마센터 설립과 운영을 참고하여 센터 건립 및 운영방안 마련

## 2. 연구 및 자료조사

### 1) 현황

- (1) 학술성과는 자료집 형태로 발간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사회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성찰과 전망』에 성과 일부를 게재하고 있음.
- (2) 부마항쟁, 6월 항쟁 등 수집된 자료들의 체계화 목록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3) 부산시내 민주화운동 연구자 부족, 사업회 내의 연구인력의 부족으로 일상적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사업마다 용역 형태로 추진되다 보니 자체 연구역량으로 이어지지 않음. 연구기반 조성이 시급함.
- (4) 사료관 건립시 인력이나 업무상의 조율이 필요함.

## 2) 기본계획

- (1)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발굴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
- (2)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범위를 4대 항쟁을 포함한 부산지역의 부문별 운동으로 넓혀 민주화운동 연구 영역의 확장과 다양화 도모
- (3) 자체 연구인력 확보를 통한 부산지역 민주화운동의 연구성과 축적과 연구역량 강화→교육 전시의 기획력 향상과 스토리텔링 확장
- (4) 부산지역의 정체성과 결합된 민주화운동 연구, 이를 통해 부산의 정체성을 담은 민주화운동을 전국적으로 발신

## 3) 추진내용

- (1) 역사현장 발굴, 보존 및 활용-부산지역 민주화 유적지의 문화자원화
  - ① 민주화운동의 범주, 자료축적에 기반한 역사현장 발굴, 자료조사 시도
    - 현재 파악된 민주화운동 유적지는 주로 4대 항쟁에 집중되어 있음. 민주화운동의 범위 확장과 함께 민주화운동 유적지를 추가 발굴 조사, 보존할 필요가 있음.
    - 관련자 파악, 구술, 문헌, 신문, 보고서 등 자료수집을 토대로 민주화운동 조사를 단계별로 설정하여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사례) 제주 4.3항쟁의 경우 추가 진상조사를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1단계에서는 마을별, 분야별(재일제주인, 교육계, 종교계 등) 피해실태를 현장조사, 증언조사, 문헌조사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단계에서는 4.3관련 행형기록, 경찰기록 등 4.3관련 수집자료 해제 및 DB화 작업을, 3단계에서는 추가진상조사보고서 발간 및 4.3 국외자료 조사, 봉기주도세력 조사, 재경 4.3생존희생자 및 유족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② 각 범주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가칭 ‘역사보존검토위원회’ 구성
  - 역사현장 발굴 및 보존을 위해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가치를 아는 역사학자, 건축가, 법률가, 관련 단체 활동가, 민주화운동 경험자 등으로 이루어진 역사보존검토위원회 조직
- ③ 유적지의 분류, DB화, 문화자원화 시도

〈표 6〉 부산 민주화운동 유적지

관련 사건	유적지명	주소
4월혁명	신정릉 추모비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385 금정중학교 내, 부산시 금정구 금정도서관로 108

4월혁명	산수 이종률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비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부마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발원지 표지석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부마민주항쟁	부마길 표석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부마민주항쟁	10.16부마민주항쟁탑 (민주화운동 열사 묘역)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부마민주항쟁	넉넉한터(옛 운동장)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부마민주항쟁	온천교사거리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부마민주항쟁	동래경찰서와 부산교육대학 앞 사거리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70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217
4월혁명	동래고등학교	부산시 동래구 총렬대로 285번길 22
4월혁명	4.19혁명 진원지 표석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 새싹로 1 (도시철도 서면역 11번 출구)
6월항쟁	6월항쟁의 중심지 표석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257-1 (도시철도 서면역 5번 출구)
5.18민주화운동	쌔미공원 오월결상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517-5
4월혁명	강수영 열사 추념탑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1동 전포대로 175번길(경남공업고등학교 내)
6월항쟁	민주헌법쟁취범국민운동 부산본부 사무실터	부산시 부산진구 범일로 185 (도시철도 범내골역 1번 출구)
4월혁명	범일동 구름다리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 2동 548-15
	부산 YMCA(부산기독교청년회)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19
	대공분실 터	부산시 동구 충장대로 289번길 17
	민주공원	부산시 중구 민주공원길 19
	4.19광장	부산시 중구 민주공원길 19
6월항쟁	해광고등학교 박종철 추모비	부산시 중구 망양로 259번길 5
노동운동	한진중공업 앞 김주익 박창수 객차 규 열사 합동추모비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 230
	롯데백화점 광복점 (옛 부산시청)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2
부마민주항쟁	부마길 표석	부산시 중구 광복로 62
부마민주항쟁	구뚝방골목	부산시 중구 남포동 3가 16
부마민주항쟁	BIFF광장(옛 부영극장)	부산시 중구 비프광장로 40
6월항쟁	대각사	부산시 중구 광복중앙로 19
미문화원방화사건	부산근대역사관	부산시 중구 대청로 104
6월항쟁	부산가톨릭센터 6월민주항쟁표석	부산시 중구 중구로 71

	부산중부교회	부산시 중구 책방골목길 13-10
부마민주항쟁	부산양서판매이용협동조합	부산시 중구 흑교로 46번길 10-1
6.3항쟁, 부마민주항쟁	동아대 구덕캠퍼스	부산시 서구 대신공원로 32
6.3항쟁	구덕운동장	부산시 서구 망양로 57
	동아대 부민캠퍼스	부산시 서구 구덕로 225
6월항쟁	동아대 승학캠퍼스 <6월민주항쟁도><6월민주항쟁기념비>	부산시 사하구 낙동개로 550번길 37
	양산솔밭산열사묘역	경남 양산시 하북면 답곡리

자료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주역사길 스토리투어』.

- 민주화운동의 범위 확장에 맞게 민주화운동의 역사로 기억할 만한 사건, 집회장 소로서의 사적, 건물, 중대한 정치적 전환점을 만든 시위 등을 대상으로 발견된 사적지를 대상으로 DB화하고, 가칭 역사보존검토위원회에서 보존방안, 문화자원화 방안 모색

사례1)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문화재(선면 단위)로 등록하는 방안 : 개별단위 근대 건축물에서 그 주변의 관리를 통한 지역활성화 및 활용방안 모색 : 통영, 군산, 목포, 영주 등에서 실시-가톨릭 센터에서 책방골목에 이르는 구역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 모색하여 중부교회, 양서협동조합 등을 포함한 민주항쟁 유적지로 보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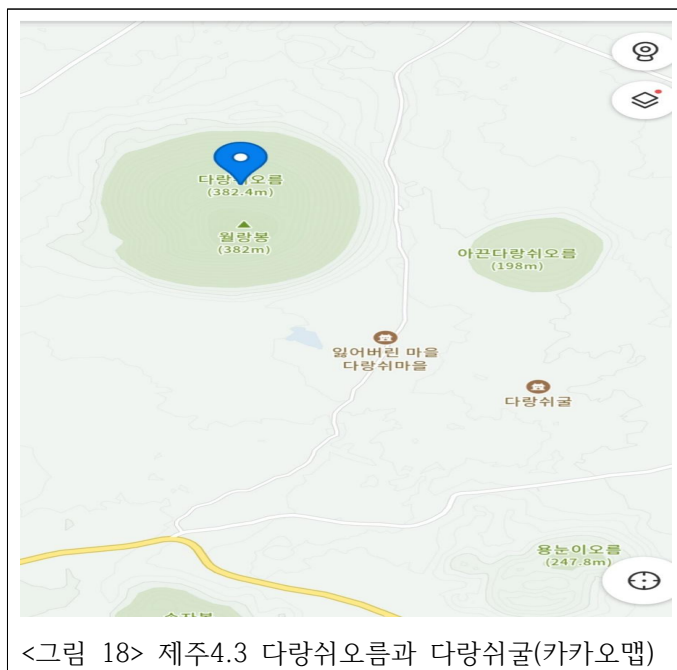
사례2) 박종철 거리 : 현재 명명단계에 불과,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민주화운동 유적지화 할 필요가 있음.



사례3) 부산진구의 싹지공원, 오월걸상, 4월혁명 진원지, 6월항쟁 중심지의 관리 소홀, 이 곳 전체를 싹지공원화하여 관리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함.

- 민주화운동 유적지의 국가 공식 지도 등록(카카오맵 등)-부산 민주화운동 관련 유적지 및 기념 표지석의 위치를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특정한 부호(부산민주화운동 캐릭터)와 함께 지도에 표기해 활용하도록 함. 일반적으로 방문자들은 특정 유적지와 관련해 상세한 위치나 관련 내용을 폭넓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민주화운동 유적지를 지도상에 표시하여 탐방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타지에서 부산을 방문하는 경우 부산의 관광지와 민주화운동 유적지를 결합하여 안내함으로써 부산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사례) 제주 4.3유적지에서 관광지 다랑쉬굴을 검색하면 부근에 4.3항쟁 당시 마을 주민들이 소개된 이후 마을이 복구되지 못한 ‘잃어버린 마을 다랑쉬 마을’과 마을 주민들이 숨어있다가 토벌대에 의해 죽임을 당한 현장인 ‘다랑쉬굴’이 표기되어 있어 오름을 방문하려고 했던 방문객들의 관심이 4.3유적지까지 확장될 수 있음.



#### ④ 민주화운동 유적지 관리-조형물 설치와 관리

- 현재 민주화운동 관련 유적지 관리형식은 기념비, 표지석 등 다양한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으나, 현재 아무런 표식이 없는 경우는 유적지의 의미에 걸맞는 형식의 조형물 설치가 필요함.

<서면로타리 근처 민주화운동 유적지 관리 현황>



<그림 19> 고 강수영 열사 추념탑



<그림 20> 6월항쟁 중심지 표석



<그림 21> 오월결상



<그림 22> 4.19혁명의 진원지 표지석

- 민주화운동 유적지 관련 조형물 설치 주체는 부산시, 지자체, 민간단체 등으로 다양함. 하지만 설치 이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없어 방치되고 있음.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설치된 조형물의 내용은 사건의 개요가 간략히 소개되어 있으나, 당시 경험자들의 구술내용이나 문헌기록 등 특정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음.
- 유적지 해설 프로그램의 다양화 : 부산 문화관광과 접목시켜 민주화운동 소개
  - 부산관광 관련 센터에 리플릿 비치
  - 전문 해설사의 해설이 가능한 공간 범위와 시간대 확장
  - 디지털 리플릿, QR 코드 활용 : 유적지 설명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구술내용을 포함시켜 유적지 의미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

## (2) 민주화운동 자료 조사

### ① 4대 항쟁을 포함한 부산지역 부문별 민주화운동(노동, 학생운동 등) 관련 문헌자료와 구술자료를 포함한 기초자료 조사 실시

- 기초자료의 체계적 축적을 통해 연구, 자료정리, 체계적인 서비스, 기념사업의 토대 마련
- 구술자료의 범위 확대
  - 부산의 민주화운동은 부마항쟁에 집중되어 있음, 부마항쟁뿐만 아니라 4.19 혁명부터 6월항쟁, 각 부문별 운동에 대한 자료를 기관, 재단, 학교 등과의 연계를 통해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역 중심의 민주화운동 자료 발굴과 축적이 필요함. 예를 들어 6월 항쟁의 경우 서울 중심의 채록이 많음. 그러나 서울의 6월 항쟁이 끝나갈 무렵 부산의 6월 항쟁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짐. 부산 중심의 6월 항쟁 채록이 수집 축적되어야 함.
  - 학생, 노동, 여성, 문화예술, 교육, 시민사회 등 각 부문별 운동의 관련자 정보 DB화→구술인터뷰 진행→구술자료 구축(아카이브) 및 자료집 발간의 순으로 연구자료 확보
  - 민주화운동 참가자의 고령화로 인해 이들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구술 및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좀 더 깊이있고 광범위하게 채록되어야 함.
  - 이제까지 직접 관련자 위주로 박물관, 부마재단, 민주공원 등에서 구술채록을 해 왔으나 앞으로는 사건이나 운동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일반인의 구술 및 자료(일기, 편지, 사진, 팸플릿 등)도 폭넓게 수집하여 민주화운동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구술작업은 관련 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한편, 구군 단위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민주화운동 인사, 간접 관련자를 다양하게 섭외하고, 구군 단위의 민주화운동 인물로 선정하여 시민과 지속적으로 연결시키는 작업 필요.

사례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구술아카이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4.19혁명//한일협정반대운동//3선개헌반대운동//6.10민주항쟁//1970년대 민주화운동//1970년대 학생운동//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사건과 시대별 운동과 노동운동//농민운동//반민운동//인권운동//여성운동//재야운동//해외민주인사의 부문별 운동으로 민주화운동 관련 구술아카이브를 제공하고 있음.

\*구술아카이브는 모두 영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해당 구술마다 구술자 소개, 구술 내용 요약, 구술 상세 목록이 덧붙여 있음.

사례2) 5.18 관련 기관의 구술채록 작업 : 구술채록집 발간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의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 \*광주YMCA (한국기독교청년회) 『5.18영상기록』
-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의 『5.18영상기록』
- \*국사편찬위원회의 『5.18참여 여성의 구술생애사 연구』(2005~2006)
- \*전남대 5.18연구소의 『5.18증언자료집』
- \*대한의사협회 한국 의사 100년기념재단의 ‘5.18 민주항쟁 의료활동 재조명사업’(2008)
- \*5.18기념재단의 ‘구술채록사업’(1999~ )

## ② 연구사업

- 지방정부, 대학, 민간기관 간의 연구체계 구축 및 연구지원 확대
- 민주화운동 자료 정리와 자료집 발간사업
- 정기 학술대회 운영(지역, 국내외 연계) 및 결과물 출판 : 3년 단위의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학술대회를 기획, 진행.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은 반드시 학술지(등재지 지향)에 게재하고, 이후 그 성과를 학술총서로 발간하는 작업(3년 1회)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연구성과 및 연구인력 축적
- 민주화운동 연구기관 및 전문인력 DB 구축

## ③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아카이브 공유 및 협력

- 중앙정부 중심의 연구지원 체계를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지방정부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역 민주화운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내외 유관기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기록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역사기록물 전시, 홍보하는 상시적인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민주공원과 부마재단의 통합 아카이브 구축
- 4.3 평화재단, 5.18 기념재단, 5.18기록관, 노근리평화공원, 부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과의 아카이브 공유

## ④ 사료관의 위상확보와 운영계획 마련

- 민주공원 부속시설, 부산지역 민주화운동의 거점 사료관으로서의 위상 확보
- 전문 인력 배치와 운영 시스템 마련
  - 종이책, 사진, 동영상, 구술채록집 등의 자료 분류와 보관, 자료 훼손 방지, 이용자 중심의 자료이용을 연구,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배치
  - 사료관 위상에 맞는 운영계획 수립 : 사료관 건립 이전에 운영조직과 운영시스템, 향후 사업 등을 수립함으로써 건립과 동시에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사료관 시설지원과 관련한 전문 안전인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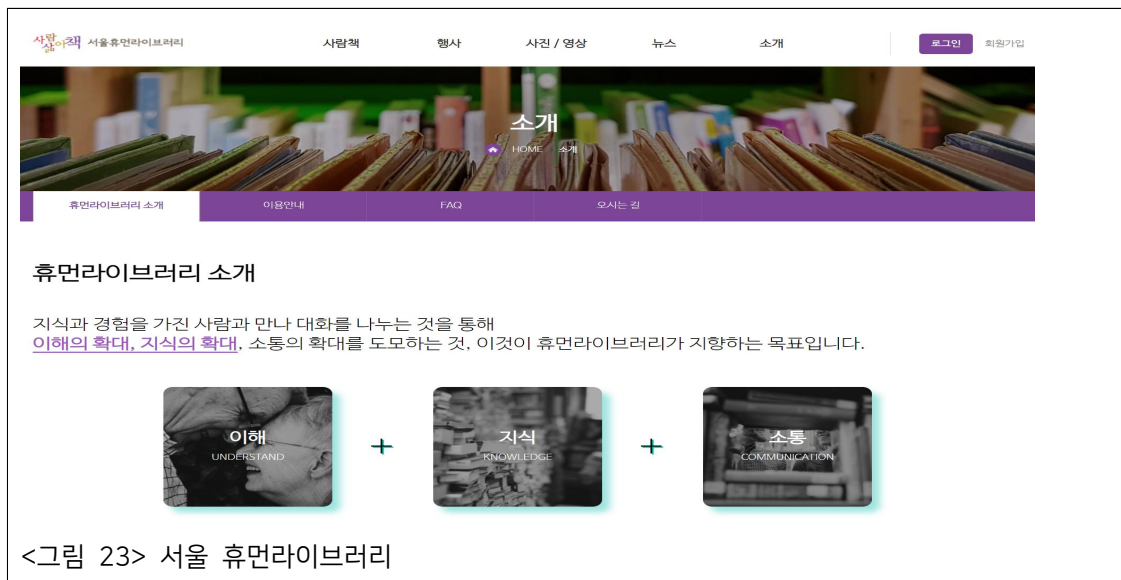
사례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 아카이브



사례2) 광주 5.18 기록관 : 관장(1), 관리실(건물보수 유지, 전기, 기계시설, 보안, 도서관리, 청사방호, 주차 등 12명), 연구실(기록물관리, 학술조사, 홈페이지 관리, 전시해설, 자료정리 등 12명)

- 문서정리 방식의 다양화 : 자료의 DB화와 함께 문서정리 방식을 인물사전, 사건사전, 사진박물관, 휴먼라이브러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리하여 활용의 극대화를 도모

사례) 서울시립대학교 휴먼라이브러리 : 휴먼라이브러리는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과 만나 대화를 나눔으로써 이해, 지식, 소통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듯이 사람이 책의 역할을 하여 사람책을 빌려볼 수 있음. 사람책으로 등록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책처럼 자유롭게 대출하여 그들의 경험, 지식, 정보를 공유하여 사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음. 이러한 휴먼라이브러리의 개념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적용하여 사람책을 매개로 민주교육 정신을 확산시키고, 관련자들의 치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3) 민주화운동 자료 체계화 및 목록화

- ① 문헌자료, 사진자료, 동영상자료, 음성자료 등 DB화, 자료집 발간
- ② 문헌자료 입력, 사진자료 및 동영상자료 해제, 음성자료 녹취록 작업
- ③ 민주, 인권, 평화, 생태, 다문화, 노동 등 부문별 운동 구술 자료 및 자료 수집 및 DB화

④ 민주화운동 관련 기본 사료 통합 구축 DB

- 중앙기관과의 제휴, 네트워크 구축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및 대학 연구소와의 네트워크
- 부산시 소관 기록관과 박물관의 연계, 자체 소스의 개발
- 민주화운동 연구사업, 사료관리, 네트워크 강화방안
- 민간단체 보관 사료 전산화
- 사료집 발간, 공유

⑤ 온라인 기반 민주화운동 정리 체계 마련

- 연구, 사료, 기념사업 등의 결과를 온라인 형태로 축적
- 이용자 중심의 운영을 통해 민주화운동 사료의 능동적 이용을 도모하고 기록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민주화운동 사료를 찾는 이용자를 세분화하여 그에 맞는 서비스 제공
  - 학생 및 교사,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사료 콘텐츠 구축
  -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위한 다양한 아웃리치 서비스 개발

(4) 자체 연구인력 확보와 연구역량 강화

① 대학의 연구소, 관련 학과 등과 연계한 자원 활용

② 민간기관의 연구활동 참여 모색

- 민주화운동 관련 민간기관의 운영자 혹은 회원 가운데 민주화운동 경험자, 활동가의 연구 참여 및 협력관계 형성
- 민주화운동 참여자와 연구자 매칭 시스템 구축

③ 연구자 육성 프로그램 마련

- 보훈처, 행정안전부, 한국연구재단과 한국학진흥원 등 교육부의 연구지원 체계에 민주화운동의 진실규명을 위한 연구지원 항목 신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구소 육성 및 개인/공동연구 지원 분야에서 민주화운동 연구분야를 특화시킬 필요가 있음.
- 지역의 대학과 연계하여 민주주의 강좌, 협동과정, 대학원, 연구소 설립
- 대학의 민주화운동 관련 연구자 풀 DB구축 및 활용
- 연구비 지원을 통한 박사학위논문 등 연구지원 프로그램 신설
- 연구인력의 증원 : 연구인력을 증원하여 각종 연구용역사업을 최대한 자체 자원으로 소화함으로써 연구력, 기획력 등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음.

5) 기념문화사업의 확대

- 조사 연구자료를 토대로 한 다양한 스토리 개발과 깊이 있는 문화사업(문학, 예술, 공연, 축제 등)을 도모할 수 있음.
- 추모사업과 연계한 공모제

### 3. 교류 협력

#### 1) 현황

부산시내 유관 기관들과의 교류는 상시적이기보다는 사업이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한 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 기본계획

- (1) 5.18재단, 제주 4.3 평화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국내 민주화운동 기관들과 지속적인 교류와 공동사업을 모색하여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장
- (2) 정부, 부산시, 민주화운동 기념시설이 있는 지방단체, 부산경남지역 기관 단체 등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사업의 효율 도모
- (3) 아시아 및 글로벌 민주화운동 단체, 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축

#### 3) 추진내용

##### (1) 국내 기관과의 연대강화

##### ① 전국 민주화운동 단체 네트워크 구축과 DB화

<표 7> 전국 민주화운동 네트워크 구축 대상

	연대 대상	비고
중앙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li> <li>•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전시, 출판, 학술, 문화 등)</li> <li>•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기념, 추모, 진상규명)</li> <li>•국가보훈처(기념, 추모, 보상)</li> </ul>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산광역시청, 인권노동정책담당관, 인권증진팀, 부산민주공원</li> <li>•대구광역시청, 자치행정과, 2·28기념중앙공원</li> <li>•대전광역시청, 자치분권과, 3·8민주의거공원</li> <li>•창원시청, 자치행정국, 국립3·15민주묘지</li> <li>•서울특별시청, 주민지원팀, 서울시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사업</li> <li>•제주특별자치도청, 자치교육분과, 4·3지원과, 제주4·3평화재단</li> </ul>	

##### ② 지역간 민주화운동 추모 기념행사 공유 및 문화교류와 더불어 정신계승을 위한 인식틀과 방법론 공동 모색

- 주요 민주화운동 도시와 협약 체결 및 협력사업 진행

사례) 서울시는 2020년 광주광역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

음. 주요 내용으로는 민주인권주간 지정, 문화, 예술, 학술행사 개최 계획, 서울기록원과 광주시청 등 두 도시를 순회하는 특별전시, 역대 광주비엔날레 참여 작품을 재구성한 5.18특별전, 문화예술 공연, 민주·인권·평화 관련 정책 교류순회 특별전 운영.  
-공동 기념행사 추진 : 6월 항쟁 기념행사, 4.19혁명 기념행사 등 각 사건들과 연계성이 있는 지자체와 연대하여 기념행사 진행

③ 민주화운동기념 전시, 출판, 학술, 문화사업의 공동 추진

-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과거 사건을 규명하는 수준을 넘어서 현재와 미래세대와 소통하기 위한 정신계승과 관련한 주제에 집중하여 건설적인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고, 지역 차원을 넘어 전국을 대상으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동 학술대회를 진행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음.
- 지역차원의 학술대회도 전국의 유관단체와의 연계 속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진행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민주화운동 및 정신계승 차원으로 집중시킬 수 있음.
- 국내 청소년, 대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민주화운동 주제 사진, 그림, 연극, 영화 등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관련 사적지를 문화자원으로 특화할 수 있음.

④ 과거사 진상규명 및 정명운동 공동추진, 국제사회 홍보, 연대활동 강화

⑤ 전국 청소년 토론대회, 사회참여 발표대회 개최 등 청소년의 민주의식 함양, 민주시민 교육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각종 토론대회, 공공정책 제안 대회 등의 활성화(교육청과 협력)

사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와 4.3평화재단의 영어스피치 대회

<p>&lt;그림 24&gt;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p>	<p>&lt;그림 25&gt; 제주4.3 전국청소년 영어스피치 대회</p>

⑥ 각 지역의 민주화 사적지를 연계한 역사탐방 프로그램 개발(지도제작, 지도맵 등)

- 미국 국립공원의 주니어레인저 프로그램처럼 각 지역 민주화 사적지를 탐방하여 프로그램을 수행하면 지역 민주화 배지를 기념품으로 증정하여 전국 민주화 지도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함.

#### ⑦ 민주화운동 해설사 교육 및 교류사업

### (2)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 ① 부산시 관, 민간단체와의 효율적인 연대 협력을 위한 상설 협의체(공무원(분과 관련부서), 유관기관(교육청, 박물관, 역사관 등 분과 관련기관),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 구상-사업 중복 방지와 사업들 간의 유기성 확보. 정책 시너지 창출
- ② 사업의 유형에 따라 추진방식은 다를 수 있으나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시민참여와 민주화운동 관련 당사자들의 직접 참여를 높이고, 시는 민간의 활동을 후원하는 형태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③ 부마재단과의 공동사업, 아카이브 공유 등 중복되는 사업의 특성이나 업무 조정 및 협력 관계구축
- ④ 독립운동 단체,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민주화운동의 연속성, 범위 확장 방안 모색

### (3) 해외 민주화운동 기관 단체, 연구기관과의 연대강화

- ① 아시아 네트워크 구축
  - 민주화운동을 경험한 아시아 주요 도시, 기관 단체, 연구기관들과 협약 체결
- ②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민주화운동을 경험한 세계 주요 도시, 기관 단체, 연구기관들과 협약 체결
- ③ 홈페이지를 비롯한 웹상의 시스템 재구축 및 다국적화(언어, 매체, 수어해설 등)를 통해 소통 공간 확대 및 협력 방안 모색
  - 부산시 민주화운동 연표 및 관련 활동 등 영문(기타 외국어) 홈페이지 또는 SNS 제작 지원, 웹전시 활성화

## 4. 교육

### 1) 현황

- (1) 교육청 내 민주시민교육위원회에 상임이사(민주공원관장)가 참여하고 있으나 깊이 연관되어 있지 않음. 사안별로 협조하는 관계
- (2) 특히 현장(공교육)과 사업회에서 추구하는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을 둘러싸고 이견 존재
- (3) 교육 문화팀, 나락한알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음.

### 2) 기본계획

- (1) 지역의 대학, 초중고를 대상으로 민주화운동 및 민주주의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함-세대교체와 세대변화를 고려하여 부담스러운 과거사 교육을 지양하고 보편적 가치와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 지향
- (2) 민주화운동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 (3) 대상자별 교육사업의 체계화 전문화 다양화
- (4) 대면교육에서 실시한 내용 즉 대상자별 프로그램, 전시, 아카이브 등을 인터넷 공간에서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언택트 시대에 조응하고, 시민참여 활성화 모색

### 3) 추진과제

- (1) 대면 콘텐츠 개발 운영 : 대상자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설치 지원
  - ① 교육청과의 MOU를 체결하여 초·중·고까지 민주시민교육 확대, 교육콘텐츠 개발 운영
  - 교육 주체간 실무협의체 구성 : 민주시민교육의 확대를 위해 교육청, 학교, 민주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이 체계화 정착될 수 있도록 함. 나아가 5.18 교육협의회와 같이 전국 민주화운동 재단 및 단체와의 연계 속에 민주화운동 가치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관계 교육기관 및 단체와의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확대 및 발전방향 모색
  - 교육청과 연계한 민주주의 학습 심화와 교육인증프로그램
    - 민주시민교육 교재 개발
    -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실(학교 방과 후, 사회과 수업, 진로탐색, 써머(윈터)스쿨 등 활용)
    - 휴먼라이브러리 개념을 도입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와의 만남의 장 마련.
  - 대상자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아동부터 성인, 가족, 외국인 등 다양한 대상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아동대상 민주화운동 동화구연, 청소년, 가족대상 민주화운동 캠프, 외국인 대상 민주화운동 유적지 탐방, 청소년 사회 참여 발표대회 등

사례) 5.18기념재단의 오월학교 및 우리동네 오월학교 운영 : 미래세대(청소년, 청년), 교사, 일반 시민, 공직자를 대상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와 가치를 올바르게 계승하고 이어가기 위해 대상별 다양한 참여형 사업 및 교육연구 추진. 오월교육 12원칙 마련.

<표 8> 5.18기념재단 오월학교 프로그램

대상	교육 프로그램
교사, 시민단체 활동가	오월길 자유연수, 교사연수(집합형)
대학생, 청년	5·18역사탐방, 사회참여프로젝트 지원, 전시 및 문화기획 지원
공직자	5·18교육 실태조사, 5월 교육 제도화 추진, 교육콘텐츠 개발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시민일반, 청년(대학생), 청소년
교육연구 및 정책개발	오월교육원칙 정립, 5월교육 실태조사 및 제도화 등

\*우리 동네 오월학교 : 전국의 교육 전문활동단체 및 동네책방과 연계해 지역별 특화된 오월학교 프로그램 운영, 전국 동네책방 오월서가 운영(광주 14곳, 전국 36곳)을 통한 5·18교육자료 배포 및 프로그램 운영

## ② 해설사 양성프로그램 운영

- 민주교육 지도사, 안내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전문 해설사, 주니어 해설사, 시니어 해설사 등으로 구분하여 참여 확대 : 부산 민주화운동과 민주교육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연령층의 해설가 및 활동가 양성
  - 전문 해설사 : 공식해설사 자격 인증 절차를 만들고, 시험을 통해 자격을 발급하여 전문 해설사로 채용
  - 주니어 해설사 :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하루 혹은 하나의 시설을 해설하도록 하고, 이를 학교 활동으로 인정하도록 함
  - 시니어 해설사 : 은퇴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설사 교육을 실시하여 하나의 시설, 혹은 민주화운동 유적지 답사코스를 개발하여 해설하도록 함. 부산, 그리고 민주화운동을 직·간접으로 경험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장감 있는 해설이 될 수 있도록 함.
- 민주공원과 부마재단과의 협력 속에 민주화운동 해설사 양성 및 운영방안 마련
- 교수 이수자 확대 및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 공무원, 교원 연수 및 기업 연수에 민주화운동 관련 과목 포함

- 교육이수자에 대해 자격증과 수료증을 부여하고, 이후 해설사 지원시 가산점 부과
- 타지역 민주화운동 해설사와의 교류, 상호교육 실시

### ③ 지역의 대학에 교양과목, 비교과목 운영 지원

- 지역의 대학 교과목에 한국을 포함한 세계 민주화운동 역사와 관련된 교과목 개설 및 지원 : 대학의 필수교양과목으로 부산의 민주화운동을 이해할 수 있는 지역사회 및 민주화운동 관련 과목 신설 지원
- 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심화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 대학 연구소 혹은 시민도서관, 각 구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주제 인문학 강좌 개설, 운영 지원

### ④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 단체, 동아리 및 모임 지원

### ⑤ 축적한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스토리 개발

- 문인협회, 부산스토리텔링협의회와의 협업을 통한 스토리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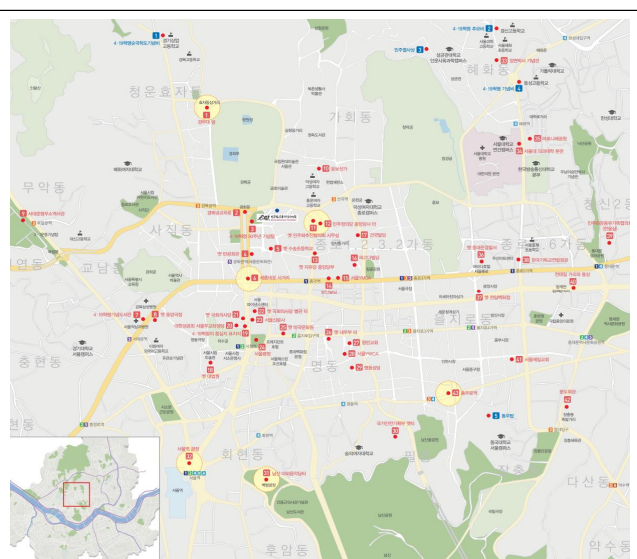
### ⑥ 교육내용의 다양화

- 수요자 중심의 민주화운동 체험 프로그램(사건/부분/지역/주제별 탐방 주제 다양화)
- 국내외를 포괄하는 견학 및 여행프로그램 개발
- 부산지역 민주화운동 역사지도 및 어플 제작

사례1) 서울민주화운동역사지도



<그림 26> 서울 민주화운동 역사지도



<그림 27> 서울 민주화운동 역사지도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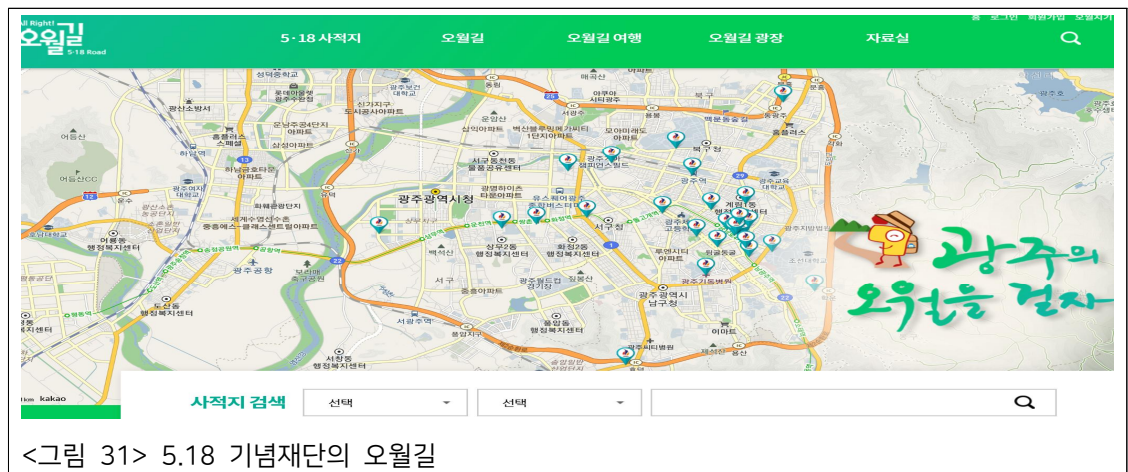
사례2) 부마로드



사례3) 제주 4.3 유적지(구글맵)



사례4) 광주 오월길 : 인권, 민중, 의향, 예술, 남도 5개 길 코스



사례5) 민주공원의 각 구별 부산민주역사길(유튜브)



<그림 32> 민주공원에서 운영하는 부산민주역사길

- 전체 지도의 흐름과 각 세부 코스마다 스토리 구성
- 각 구청, 군청과 연계하여 구역별 코스 세분화하여 구성

(2) 비대면 콘텐츠 개발 운영 : 온라인 활성화

① 민주화 정신의 세계화,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증 확산 등을 대비한 언택트 콘텐츠 개발 필요

② 홈페이지를 활용한 교육, 전시, 자료 연계와 일원화

- 교육 프로그램의 온라인 이수
- 수집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시민들이 1차 사료를 통해 민주화운동을 직접 체험하게 함.
- 온라인 전시, 가상현실, 증강현실 프로그램 개발 운영

③ 청소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유튜브 영상 콘테스트

④ 온라인 문화제 개최

(3) 민주화운동 가치 교육

① 부산의 미래유산, 미래세대가 공유하는 기억 유산으로서의 민주화운동 가치 개발

② 민주시민교육센터 건립을 통한 교육의 전문성 강화

- 인권 평화, 생태 등 운동 범위를 확장하여 그 가치와 의미 개발 교육 확산에 집중
- 민주화운동 가치 계승 활동가 양성 : 해설사, 시민활동가, 민주시민교육강사, 문화기획자 등 양성프로그램 개발 운영 전담

## 5. 홍보

### 1) 현황

홈페이지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고 있으나 효과적이지 못함. 특히 차별화되면서도 현재의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한 홈페이지 디자인, 빈약한 아카이브로 인한 자료이용의 어려움 등으로 홍보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

### 2) 기본계획

- (1) SNS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민주화운동을 홍보하고 시민참여를 높임.
- (2) 연령별 대상자별 전략을 통한 홍보효과 극대화

### 3) 추진과제

#### ① 홈페이지를 통한 국내외 홍보 활성화

- 홈페이지 구축 및 업그레이드에 전문인력 투입
- 글로벌화를 위한 다국적 언어, 매체를 활용하여 홈페이지 구축
- 자료 및 구술 인터뷰, 학술회의 등 관련 자료나 활동, 웹진을 업로드하여 국내외 유관 단체, 연구소와의 네트워크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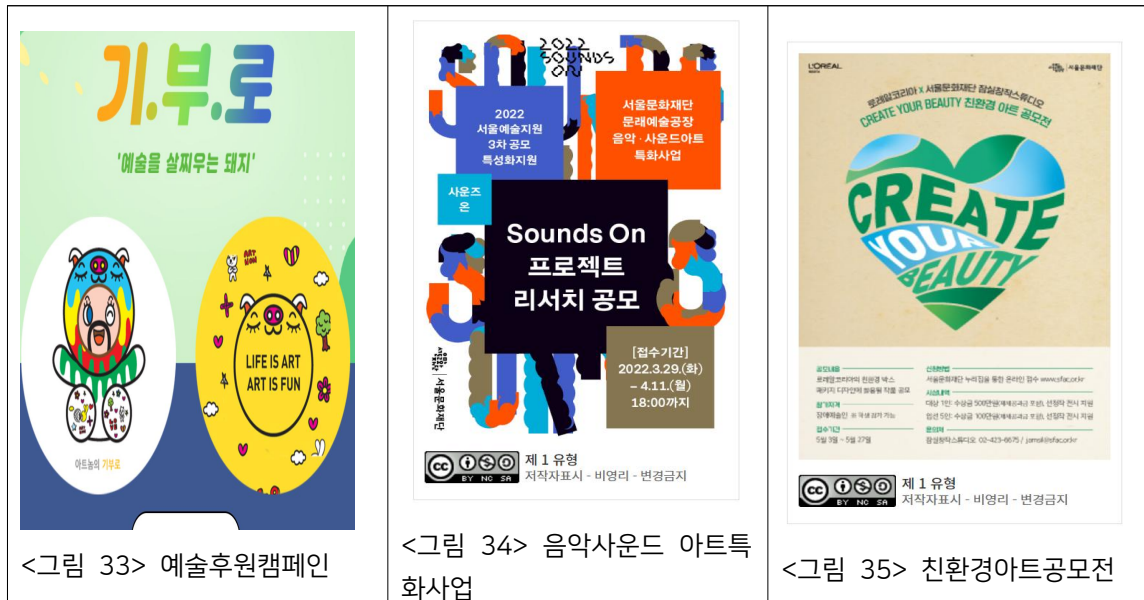
#### ② 연령, 대상을 고려한 민주화운동 홍보단 구성 및 운영

- 연령별 홍보내용 및 홍보방법의 차별화
  - 청년활동가를 육성하여 그들의 활동을 SNS 등 온라인에 올림으로써 같은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홍보. 민주세대 육성과 홍보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음.

사례) 5.18기념재단 청년활동가 육성사업 : 5.18기념재단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통해 선발된 청년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과 민주주의·인권 의식 증진을 위한 자발적인 활동을 독려. 한 해 동안 홍보 및 왜곡대응, 프로그램 기획 및 참여, 연구 및 학술분야의 5.18기념사업 참여와 상시적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증진을 위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있음.

- 지역의 문화예술가, 시민들과 협력을 통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와 결합한 홍보(아티스트 콜라보 기념행사 및 상품 제작, 펀딩 등)

사례) 서울문화재단의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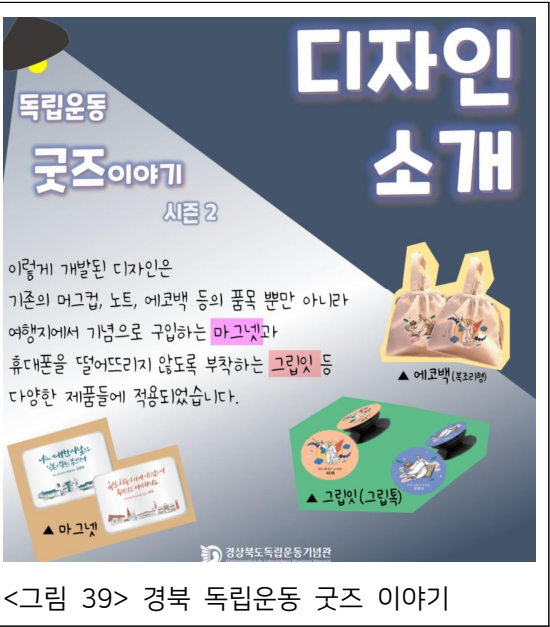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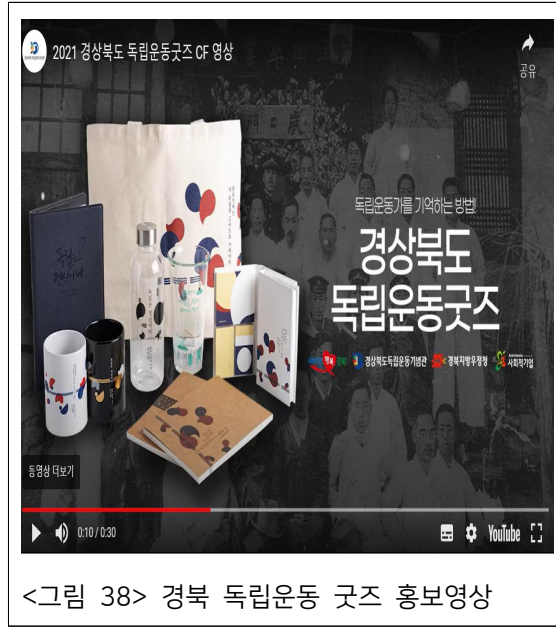
사례2) 5.18 40주년 기억을 위해 대학생 서포터즈가 <우리의 기억은 강하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직접 디자인한 5·18 기억 굿즈 펀딩(추모탑 뱃지, 전남도청 전자파 차단 스티커, 차단 스티커, 엽서, Remember0518 스트랩 키링)



### ③ 지역사회, 지역경제와의 상생을 통한 굿즈 개발 제작

사례)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의 굿즈 제작과 홍보 :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은 경상북도, 경상북도사회적기업종합상사(협)와 알배기협동조합과 함께 독립운동 굿즈와 CF 홍보영상을 선보임. 2020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이상룡(안동)과

영화 암살의 실존 모델로 알려진 여성독립운동가 남자현(영양)을 주제로, 2021년에는 김창숙(성주)·허위(구미)를 주제로 머그컵, 유리컵, 텀블러, 티셔츠, 에코백, 무드등, 노트 등 현재까지 40여 종의 굿즈 개발.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에서의 홍보와 함께 판매도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뮤지엄샵에서의 직접 구매와 우체국 쇼핑몰에서의 온라인 구매까지 가능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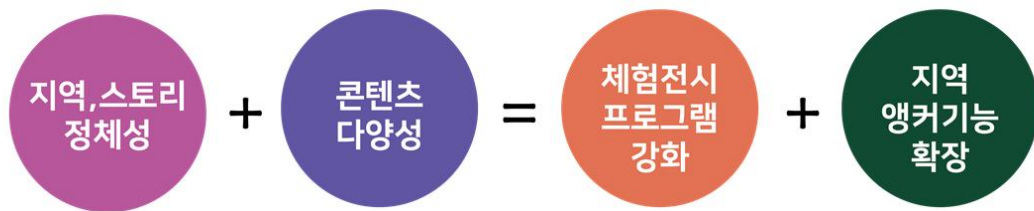




## 6. 전시시설

### 1) 전시시설 세부계획

## “기록을 너머 문화적 기억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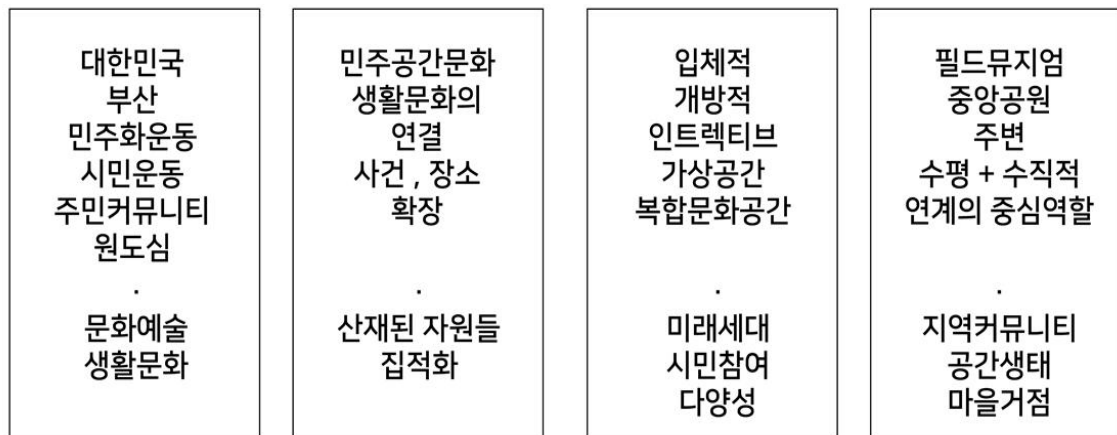
<그림 40> 세부계획 방향설정

#### (1) 기본방향의 틀

- 민주공원의 전시는 기존의 기록과 역사 중심에서 벗어나 콘텐츠와 결합하고 다양한 지역 간 네트워크의 요소들을 담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기록을 너머 문화적 기억으로’라는 기본 틀 아래 지역의 스토리와 정체성을 활용하여 콘텐츠로 활용하고자 함.
- 이를 바탕으로 지역적 요소들을 적절하게 재배치하여 새로운 개념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기존의 기능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이는 부산지역 내에 형성되어 있는 역사적 잠재유산들이 일상과 결합하는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를 위한 기본방향의 틀은 다음과 같음.
- 세부계획에서 주요한 프로세스는 민주주의와 지역 그리고 스토리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이며, 이에 앞서 기본추진전략인 일상과 프로그램 간의 결합을 어떻게 콘텐츠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반영함.
- 이를 통해 체험전시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역 앵커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지역민의 참여와 기능을 재정립하고자 함.
- 부산이라는 지역적인 특징을 민주화운동과 결합한 시민운동으로 발돋움하고, 풀뿌리운동인 주민커뮤니티와 결합하여 문화예술과 생활문화로 확장하는 전략이 필요함.
- 새롭게 발굴되거나 산재되어 있는 역사적 자원들을 구역화하거나 연결시킴으로써 민주공간문화와 생활문화를 연결하는 동시에 사건과 장소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함.
- 앵커공간의 경우 기존의 기능에서 입체적, 개방적 기능으로 더욱 확장함으로써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결합하여 미래세대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장치로 활

용하고자 함.

- 단순한 거점별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이를 연결하는 방식을 형성함으로써 공간적 수직 수평적 결합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와 마을 간의 결합까지 확장하고자 함. 예를 들면 민주공원 주변의 다양한 성격의 구조물과 생태, 거점을 연계하여 필드뮤지엄으로서 면적기능을 확장하려는 전략이 필요함.
- 이는 단순히 기능의 부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요소별 역할에 따른 기능의 재배치와 강화를 통해 기존의 거점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기존 거점시설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함.
- 산재된 역사적 자원들을 집적화하여 부산 시민들의 생활 속에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함.



<그림 41> 세부계획 기본방향의 틀

## 2) 각 구역별 계획 수립

- 부산지역 민주주의 거점공간을 총 3개의 권역으로 정리하고, 각 존별 계획을 수립하여 역할과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특히 중앙로를 중심으로 선형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스팟별 공간화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각 거점별 현황에 따른 보존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동래 금정의 학교 거점 지역은 4월혁명과 부마민주항쟁 지역으로 주요 학교 중심으로 유산과 스토리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부산대학교와 동래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통일된 표지석과 스토리 맵을 정리하고자 함.
- 서면지역은 현재 서면로터리를 중심으로 보존상태 및 기능을 부여하는 형식보다는 작은 쌈지형 공원에 불과하므로, 도심형 공원을 재정비하여 표석 및 추념탑에 대한 스토리가 반영된 코스와 안내판을 재설치하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그림 42> 동래금정권역 주요 기념비 및 장소



<그림 43> 서면권역 주요 기념비 및 장소



<그림 44> 서면권역 주요 기념비 현황

- 서면권역은 기념비 및 추모비가 있으나 가독성이 떨어지며 주변과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재정비가 필요함.
- 원도심권역은 현재 민주공원 중심으로 다양한 기록역사와 장소에 대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대청로 중심으로 구성된 근대역사관, 카톨릭센터, 중부교회, 보수동책방골목 등의 스토리 보존 이외에 역사적 장소에 대한 보존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한옥 및 우수건축자산진흥법에 관련하여 건축자산 및 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존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민주주의 관련 사업의 거점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민주항쟁기념관의 경우 면적 확장을 통한 활용계획 및 세부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민주주의 역사 스토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민주공원



중심의 앵커기능 강화와 각 권역별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권역별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를 위해 세부계획은 앵커기능을 어떻게 강화하느냐에 초점을 맞춰 계획을 제안하고자 함.



<그림 45> 각 권역별 계획 및 주요 기능 재설정

### 3) 세부계획 수립

#### (1) 기능에 따른 세부계획

##### ① 지역의 앵커기능 강화

- 현재 원도심권역에 위치한 민주공원 주변은 다양한 거점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거점별 기능을 하나의 공간 아래 기능을 재배치, 재조정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함. 특히 각 거점인 민주항쟁기념관, 사료관(예정), 중앙도서관, 광복기념관, 4.19광장 등을 연결하는 필드뮤지엄의 기능으로 재배치.



<그림 46> 민주공원 주변 거점시설 현황

- 민주항쟁기념관 이외에 광복기념관(2000)은 전시와 추모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유품 및 전시는 개관 이후 전시물이 개선 및 확장되지 않고 있으며 전시방식 또한 시계열적인 나열방식으로 전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그 외 역사 프로그램운영, 기획전시, 아카이브 기능이 없어 좁은 공간을 하나의 기능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민주항쟁기념관(1999)은 전시와 공연의 기능 이외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기록과 장소전시 유형이 한정되어 있으며 전시기법도 공간의 한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음. 특히 건물 노후화로 인해 건축물 전체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건축적 처방이 필요한 상태임.
- 민주공원사료관(2024)은 개관 예정으로 아카이브기능과 자료+영상전시를 계획 중에 있으나 일부 수장기능과 정보집적에 대한 기능 강화가 필요한 상태이며, 현재 규모로는 대규모 이벤트나 전시기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태임.
- 따라서 이러한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기능의 재배치가 필요한 상태이며 그 중심에는 민주항쟁기념관에서부터 시작하여 각 거점별 연결고리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민주역사 문화 펠드뮤지엄으로 명명하고 기록+문화+커뮤니티+체험의 기능을 각 거점별 역할로 확립하고자 함.

- 새로운 기능의 결합과 연결
- 지역의 장소를 재활용+필드 뮤지엄의 개념도입
- 지역간의 연계고리를 확보하여 지역과 주민 커뮤니티 강화 된 프로그램 운영

민주역사 문화필드뮤지엄: 각 거점공간별 역할 및 활용방안 (기록+문화+커뮤니티+체험)

- 민주항쟁기념관: 지역 앵커기능 확장 + 역사적 상징성 + 문화콘텐츠 공간으로 결합
- 민주공원사료관: 기록의 역사 아카이빙 + 정보의집적화 + 프로그램 다양성
- 시립중앙도서관: 부산문화의 기록 + 민주항쟁기념관 오픈 스페이스 공간 연결  
지역민 간의 체험커뮤니티로써 확장
- 4.19광장, 광복기념관, 대한해협전승비, 충혼탑 : 지역과 추모 스토리 공간 연결

<그림 47> 민주역사문화필드뮤지엄 세부기능

- 첫째, 민주항쟁기념관의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의 전시, 공연의 기능을 강화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주변의 기능에 대한 주요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특히 민주공원사료관이 건립됨에 따라 기록과 아카이브, 수장의 기능이 이전되므로, 민주항쟁기념관은 원도심권역 내에 다양한 전시, 문화, 공연콘텐츠를 수용함으로써 지역의 거점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
- 이는 기존의 민주항쟁기념관의 기능에서 콘텐츠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과 더불어 일상의 역할까지 수용하는 방향까지를 아우르는 기능 강화를 제안하고자 함. 또한 공간의 활용 부분에서도 문화콘텐츠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공간 재정비뿐만 아니라 관리 운영 분야에서도 전문성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계획도 함께 진행되어야 함.
- 민주공원사료관의 경우 정보의 집적화 및 공유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역사아카이빙과 더불어 전문적인 사료의 기능 활용에 초점을 맞춰야 함.
- 둘째, 시립중앙도서관은 현재 부산문화, 지역에 초점을 맞춰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향후 커뮤니티 기능으로 강화하여 지역 내 시민들 간의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확장해 나가야 함. 더불어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민간의 커뮤니티로의 확장과 민주항쟁기념관과 연결한 오픈스페이스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능을 부여함.
- 셋째, 광복기념관의 경우 현재 기능과 역할이 모호하므로 전시 기능을 제외하고 시계열적인 항쟁의 역사를 좀 더 추모에 초점을 맞춰 스토리를 전개하였으면 함. 그 외 4.19광장, 조각공원, 충혼탑, 대한해협전승비 등 외부공간에 조성된 기념물과 역사적 사건을 연결하는 브릿지 기능을 강화하여 각 거점을 연결하는 기능으로 재배치하고자 함. 이에 따른 지역 간의 연계고리를 확보하여 지역과 주민 커뮤니티가 강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집객을 높이는 방식을 제안함.



-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은 현재 민주공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생태, 자연, 역사라는 키워드를 시즌별로 활용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림 48> 민주공원 민주주의 필드뮤지엄 기능 재배치

## ② 역사적 유산의 보존활용

- 역사적 유산의 보존활용은 부산지역 내 산재된 역사적 건축물과 장소 그리고 기념물에 대한 보존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특히 원도심 내 대청로 주변의 주요 역사문화자원인 카톨릭센터, 중부교회, 보수동책방골목 등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지역 내 주요 스토리와 결합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함.
- 최근 보수동 책방골목의 경우 일부 공간이 개발의 논리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상태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남아있는 유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상태임.



<그림 49> 대청로 부근 역사적 유산들

- 우선 부산시 미래유산지정과 함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한옥 등 건축자산법) [시행 2017. 11. 28.] [법률 제15125호, 2017. 11. 28., 일부개정]에 의거하여 지역성을 반영한 우수자산 또는 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보

존활용계획의 기본 틀을 확립하여야 함.

- 이는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경관적, 사회경제적, 미래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유산에 대한 재정립을 위한 선행적인 방법으로 판단됨.
- 중부교회의 경우 현재 건축물대장상 무허가건축물로 되어 있으므로 행정상의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건축물로서 기능과 활용을 하기 위한 선제적인 작업이 필요한 상황임.

### ③ 도심형 공원기능 강화와 공공디자인 결합

- 현재 서면권역, 범일동, 동구지역에 산재된 추모, 기념비들은 훼손보다는 도심형 경관적 측면에서 소외 방치되어 있음. 이를 도심형 공원기능과 결합하여 추모 및 기념비들을 재정비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적 장소성을 기념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함.
- 또한 다양한 항쟁의 장소로서 활용된 광장 및 로터리 공간의 경우 오프라인에서 현재의 기능 활용이 어려우므로 온라인상에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함.
- 각 개별 추모비, 기념비, 그리고 장소들에 대한 통합적인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미지 통합 등으로 전체적인 연계성을 확보하는 방안 또한 필요함.



<그림 50> 역사적 스토리와 결합한 프로그램 예시



<그림 51> 통일된 심벌 및 공공디자인 이미지화



<그림 52> 심벌을 활용한 통합디자인 예시

## (2) 주요 앵커거점 활용계획-민주항쟁기념관

### ① 유사 사례분석

- 역사적 기념물로서 전시기능과 장소성을 강조한 대표적인 건축물들은 2000년대 이전과 이후에 기능과 형태에 다소 차이가 있음.
- 대표적인 예로 파리 무명유대인순교자기념관(1956), 파리 재불유대인학살기념관(1962), 미국 유대인학살추모뮤지엄(1993)의 경우 추모의 공간과 상징적인 표현, 그리고 역사적 자료 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공간의 형태와 의미로 도입부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형식으로 구성함
- 대부분 건축물의 형태에서 볼륨과 상징성 그리고 조형성을 강조하는 형식이 역사적 기념물에 많이 나타나고 있음.
- 2000년대 기념물적 건축물인 베를린 유대인뮤지엄(2001), 유럽 유대인학살추모관(2005), 샌프란시스코컨템퍼러리 유대인뮤지엄(2008) 경우 조형성에서 벗어나 의미와 체험 그리고 예술적 표현에 의한 오브제적 작업을 통해 장소적인 특징과 스토리 이에 따른 동선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역사적 의미를 재해석하고 있음.
- 2010년대 이후의 LA유대인 뮤지엄(2010), 911메모리얼뮤지엄(2014)의 경우 장소에 시각적 요소보다는 체험과 교육 그리고 의미와 예술적 본질에 대한 공간



화 작업이 나타남.

- 종합해 보면 상징성과 기록에 따른 조형성이 강하게 표현되기보다는 주요 앵커 시설들은 체험+문화+교육에 대한 콘텐츠 접근방식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음. 따라서 주요 앵커거점 시설의 경우 체험과 문화가 결합된 콘텐츠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대상지에 적용할 경우에는 전시 및 공연기능에 대한 강화를 통해 콘텐츠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세부 디자인 계획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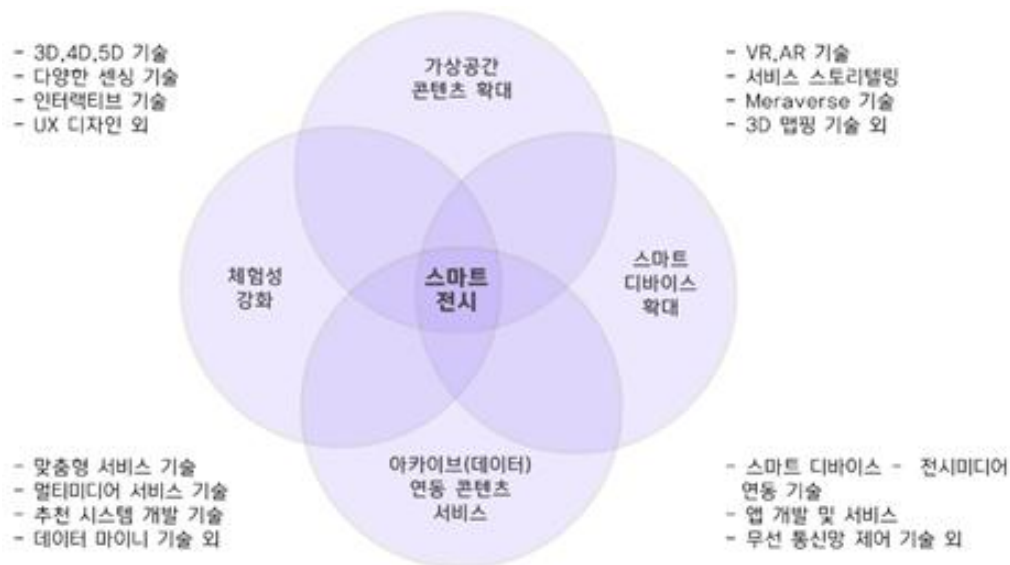
파리 무명유대인순교자기념관, 1956	파리 재블 유대인학살기념관, 1962	미국 유대인학살추모유지엄, 1993	베를린 유대인유지엄 확장, 2001
			
주요의 공간으로 구성, 24시간 타오르는 햇 불 만들어, 상징적 표현 + 역사적 자료 전시 기록과 상징성	좁은 통선과 20만개의 점들을 복도를 활용, 지하 전시관 이어지는 통선 유도. 볼륨과 상징성	공간의 이중성을 대상으로 한 암흑과 빛 투 명과 불투명성, 개방과 폐쇄성, 기록사진과 음향활용 - 기록 + 상징적	경사진 바닥과 문각과 예각의 벽으로 구축된 미로 형식의 공간구성, 좁고 긴 창들이 독일의 반성과 사죄의 의미 + 고통의 역사 - 의미와 조형성
유럽 유대인학살추모관, 2005	샌프란시스코 컨템퍼러리 유대인유지엄, 2008	LA 유대인유지엄, 2010	911 메모리얼 유지엄, 2014
			
콘크리트 볼륨 2,712개가 상부 레벨은 일정하 되 바닥은 지형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엄격한 격자 사이를 체험하며 진입 - 체험과 예술 적 표현	기억을 보존 + 천장을 통해 고난을 고통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출발 긍정적인 통선과 공간의 연계 사운드와 행위예술 결합 - 체험과 예술 교육	공간을 보존 + 지상에는 입구뿐이고, 지하에 홀로 코스트를 경험하기 위한 전시공간. 체험과 교육	오르스페이스와 기억의 장소들을 연결. 인터랙티 브 전시 등 예술과의 결합 의미와 예술

<그림 53> 역사적 기념물 트렌드 사례 분석

## ② 전시트렌드 분석

- 최근 전시트렌드에서 전시 디자인의 핵심은 ‘공간 활용’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특히 일반적인 벽부형 기록과 사실에 대한 문자형 전시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대응하여 기존의 전시 매체의 기술적 융합을 이용한 가상현실로 공간을 확장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이를 바탕으로 또 다른 물리적 공간을 선택하여 기존의 관람형 전시관의 개념을 탈피,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콘텐츠를 관람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임. 현재 진행되는 전시는 온라인 전시와 오프라인 전시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되는 방식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온라인 전시는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XR(확장현실) 등의 메타버스의 확장으로 기존의 관람형 전시관의 개념을 탈피하여 가상의 플랫폼에서 전시를 관람하는 유형을 말함. 최근에는 작가들의 NFT 기술을 활용하여 희소성 있는 디지털 작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NFT전시가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음.

- 오프라인 전시는 물리형과 상호소통형 전시로 나누어 진행되며 2D 평면의 작품 전시가 아닌 3D 입체로 작품을 구성하여 만들거나 전시를 공간자체의 형태로 구현한 입체형 전시가 주로 전시에 활용되고 있음.
- 기존에 전시방문자들은 정보를 전달받는 형식이었으나 현재는 전달자로서 관람자를 위한 공간을 연출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상호소통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함.
- 전시콘텐츠와 관람자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이를 위한 다양한 전시방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간적 확장도 필요한 상황임. 이를 위해 스마트 전시기능이 강화되며 체험성과 스마트 디바이스를 확대하여 아카이브와 연동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를 가상공간까지 연결하는 방식이 기술과 결합되어 진행되고 있음.



<그림 54> 온오프라인 전시기술의 변화

- 물리적인 전시장 환경은 기획과 콘텐츠 전시구성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매체이며 이를 통해 관람자는 개인의 경험과 배경지식을 통해 전시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
- 관람자의 참여와 소통을 유도하고 감정적인 부분과 움직임, 그리고 조명 등으로 공간과 상상력과 시각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며 이는 공간적 측면에서 좀 더 관람자 중심의 긴밀한 공간 이해가 필요한 상황임.





물리적

— 전시장의 환경  
기획의도, 콘텐츠, 전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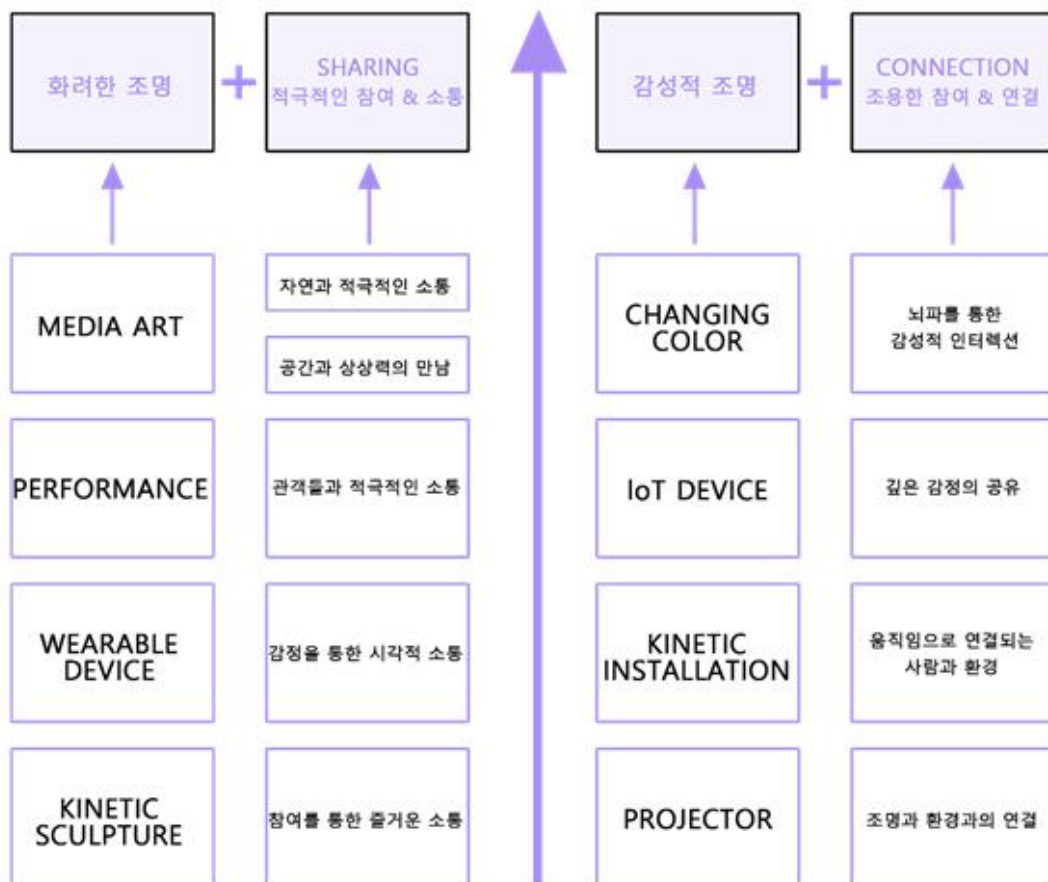


개인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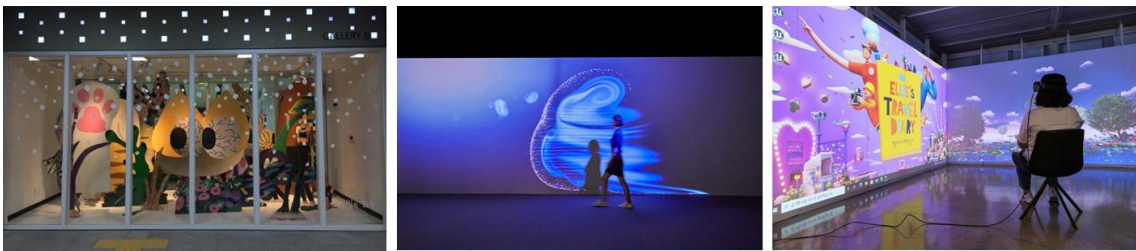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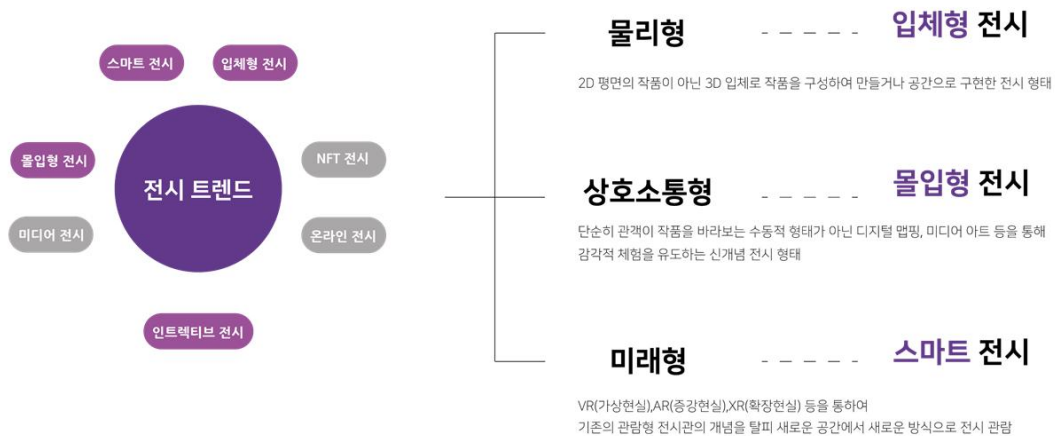
— 관람자 개인의 경험,  
스키마에서 비롯된 다양한  
경험과 사전 배경지식

- 코로나19로 인해 실외에서 문화·예술·체육활동이 힘들어진 현실에서 전시회 역시도 큰 변화의 양상으로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XR(확장현실) 등의 ICT 산업의 정점에 메타버스가 화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집약체로 관련 생태계의 패러다임까지 기술의 결합을 중요하게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민주항쟁 기념관의 경우 이러한 트렌드들을 모두 수용하기보다는 적절한 규모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INTERACTION



<그림 55> 전시구성에 따른 세부 체크 요소



<그림 56> 민주항쟁기념관에 적용 가능한 유형

- 민주항쟁기념관의 전시부분은 기존의 물리적 전시, 상호소통형 전시 미래형전시로 이루어지는 전시를 세부적으로 입체형, 몰입형, 스마트형 전시로 한정하여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③ 현황분석

- 1999년 민주공원을 개관하면서 상설전시실은 민주주의의 역사와 개념에 충실한 전시실 구성의 전범을 보여주었음. 또한 2003년에는 상설전시실을 리모델링하여 민주주의의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였음.
- 2011년 한 해 동안 두 번째 리모델링을 하여, 1기 전시의 ‘역사와 개념’, 2기 전시의 ‘교육과 체험’의 내용을 이어받아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고 교육과 체험이 연계된 전시를 진행해 왔음.
- 역사기록, 기억기록과 장소전시 유형의 전시내용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4.19혁명에 참여한 학생의 교복, 풍영노동자 신문, 타자기와 노동투쟁 전단 등 유물 및 그에 따른 민주의 탄생, 4월혁명, 부마민주항쟁 등 역사적 내용을 기록한 벽부형 전시, 협동서점을 주제로 한 입체전시를 진행하고 있음.
- 체험과 영상 등으로 부마민주항쟁이라는 주제에 대한 전시를 진행하고 있음.



<그림 57> 민주항쟁기념관 상설전시 현황

- 기억기록과 장소전시 유형은 기존의 전시공간의 한계임. 패널형으로 진행되는 설명과 벽부형으로 구성된 전시는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며 전시의 다양성 및 기법 등이 노후화되었다고 판단됨.
- 기획전시의 경우 민주공원의 성격에 맞는 다양한 전시와 퍼포먼스를 열 수 있는 공간으로 4월, 5월, 6월, 10월에는 4대 항쟁 기념일에 맞추어 기획전시를 진행함.
- 소장 작품 컬렉션 전시, 민중미술 작품전 등 민주공원만의 특색 있는 기획전시를 진행하며, 어린이, 여성, 생태, 인권 등 다양한 주제의 기획전시를 진행하기도 함.
- 2019 여순평화예술제 : 손가락총 부산순회전시 등 대부분 벽부형 전시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록을 넘어, 문화적 기억으로, 식민지구 2021#코로나그램 등 부분적인 피스를 행잉에 달아 입체전시로 진행되고 있음.
- 얼렁뚱땅 미술 놀이터, 부산물고기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등 어린이 미술 체험프로그램이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고 있음.
- 330m<sup>2</sup>의 면적을 대부분 벽부형 전시로 구성하여 공간활용도가 떨어지며, 행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층고 조절 등 물리적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그림 58> 민주항쟁기념관 기획전시 현황

- 극장 현황은 민주공원 반경 3km 내에 위치한 극장시설을 조사한 결과 민주공원이 보유하고 있는 극장 규모를 가진 시설은 전무함.





BNK 부산은행  
조은극장(2009)\_영화  
1관-245석 / 2관-167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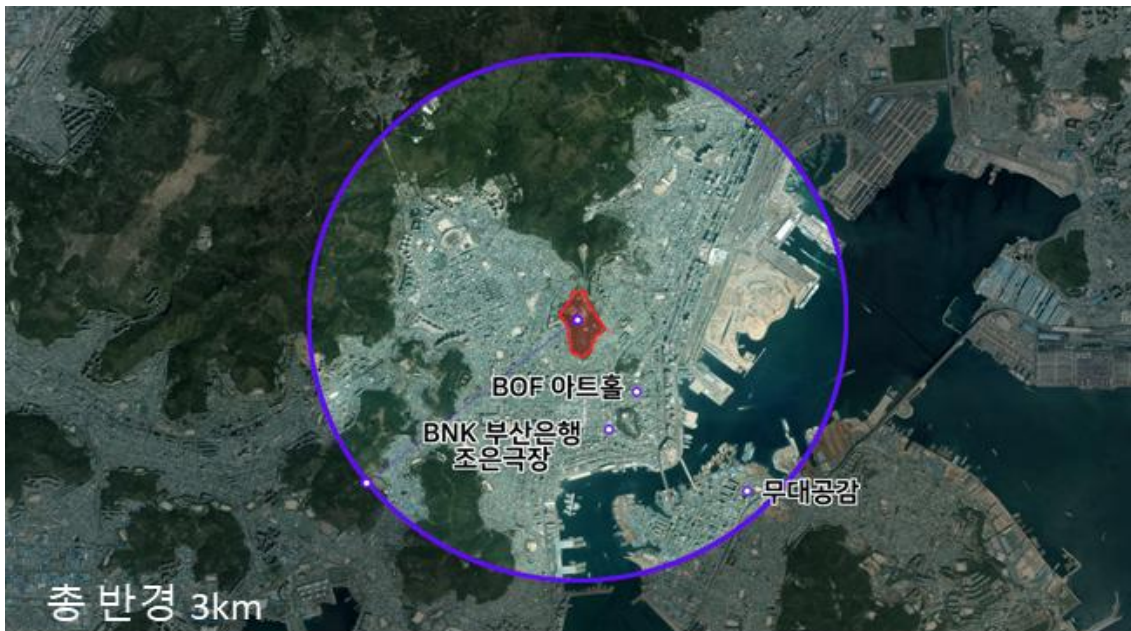


BOF 아트홀(2020) -연주  
공연장30-60석



영도 무대공감(2018)  
카페 켄스톤 내에 위치한  
소극장  
자유석 (현재 미운영)

<그림 59> 민주공원 주변 주요 극장 현황



<그림 60> 원도심 내 공연공간의 한계

- 원도심권역에는 문화공연 공간이 전무한 상태이며 이는 타지역에 비해 복합공연 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의 한계가 드러남. 이러한 한계는 민주항쟁기념관의 접근성과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원도심권역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중극장의 경우 면적 :  $440\text{m}^2$  (1F -  $385\text{m}^2$ , 2F -  $55\text{m}^2$ ) / 높이 : 7.5m / 무대상부면적 :  $160\text{m}^2$  / 객석 : 총419석 (1F - 일반 306석, 장애인 5석, 2F - 일반 113석)
- 1층, 2층 그리고 장애인석을 포함하여 419석의 좌석을 가지고 있어 중간규모의 학술행사나 각종 학예발표회 등의 용도에 적합함.
- 약  $198.34\text{m}^2$  (60평)의 무대 면적을 가지고 있는 프로시니엄 무대로, 빔프로젝터를 이용한 영화상영이 가능하나 노후도가 심각한 상태임.
- 서비스공간 부재로 관람객들이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소극장의 경우 면적 :  $360\text{m}^2$  / 높이 : 4.7m / 무대상부면적 :  $30\text{m}^2$  / 객석 : 총116석으로 덧마루를 활용한 실험용 소극장으로 설계하여 그 활용을 일정 범위로 한정함.



<그림 61> 민주항쟁기념관 중극장 및 소극장 현황

- 주로 연희자와 관중이 서로 몸이 닿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호흡하고 느낄 수 있는 마당극과 마당 춤판, 노래 공연 등 실험적인 작품에 제격으로 학술연구발표회 등 소규모 강연에도 이용되고 있음.
- 이동이 가능한 덧마루를 사용하여 무대와 마당도 자유롭게 변형시켜 활용 가능하여 실용성과 실험정신을 살릴 수 있는 이점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3) 세부계획 제안

#### ① 전시계획

- 전시계획은 크게 상설전시와 기획전시로 나누어 제안하였음.
- 상설전시의 경우 민주주의 역사전시를 기본으로 전시콘텐츠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획전시는 지역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었음.
- 상설전시는 민주공원 전시의 방문율 및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전시의 요소 및 콘텐츠를 바꾸며, 다양한 매체와 연출을 위한 공간개선이 필요하고 몰입형 체험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전시콘텐츠 부분에서는 몰입(참여)형 전시 형태를 추가, 다양한 콘텐츠 방식을 제시하여 몰입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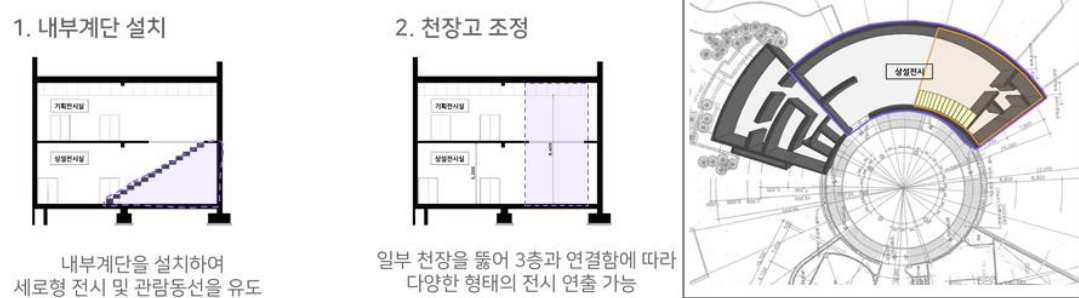
<그림 62> 구)상설전시 VR아카이브전시 전환사례(대한민국역사박물관)

- 패널형으로 된 벽부형 설명은 터치스크린을 활용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시계열적인 전개에 따라 변화된 내용을 업데이트하기 용이하게 활용함.
- 구술 아카이브(도슨트)를 도입하여 작품의 몰입도를 높이는 형식으로 전환하고 음성서비스 및 영상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스토리 전개와 전시동선 흐름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유도함.
- VR 체험전시, 인터랙티브 체험전시 등 관객이 직접 참여하여 전시와 결합하고, 지난 전시는 온라인 전시로 전환하여 지속 가능한 전시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전시물의 경우 해체하더라도 기록적 의미에서 기존의 전시를 VR전시로 전환하여 아카이브화 할 필요가 있음.

### ALT.01 확장형 기존 사무실을 체험전시존으로 변환



### ALT.02 복층형 층고조정하여 복층형 전시공간으로 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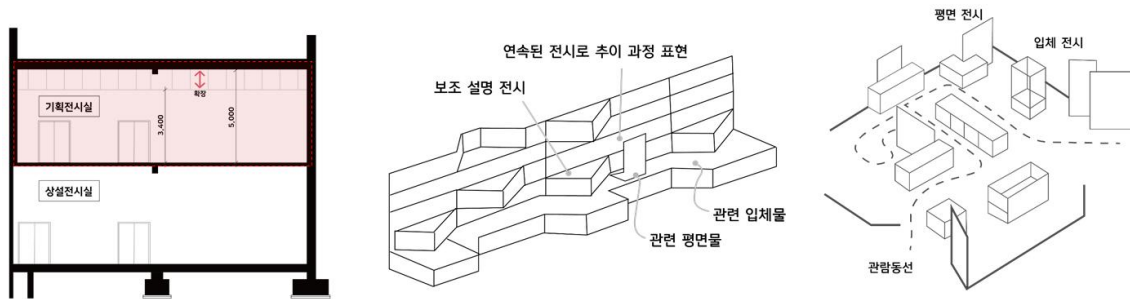
<그림 63> 상설전시 수용 가능한 공간 유형

- 이를 위해 공간적 확장이 필요하며, 확장방식은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첫 번째 방식은 확장형으로, 기존 상설전시 안에 체험공간을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실물형 전시와 체험전시를 분리시키는 방식, 이를 위해서는 사무실 공간을 식당 공간으로 재배치하여야 함.
- 두 번째 방식은 복층형으로, 층고조정을 통한 복층형 공간으로 수평적 확장이



아닌 수직적 확장을 통해 실물형 전시와 체험전시를 분리하고 내부계단을 설치하여 새로운 관람자 동선을 확보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이 두 방식 모두 리모델링 공사가 선행되어야 함.
- 기획전시공간은 기존의 기획전시기능에서 지역커뮤니티 전시까지 수용하기 위해 복합 문화공간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기존의 기능에서 아일랜드형 전시와 입체전시 등 다양한 공간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우선 층고 부분의 확장이 필요함.
- 아일랜드 전시로의 전환은 전시물의 가독성을 높이고 동선을 자유롭게 구성하는데 용이하므로 현재 층고인 3.5m를 적어도 5m 이상으로 확장하여 공간을 극대화하여야 함. 이를 통해 다양한 전시유형을 수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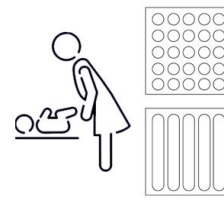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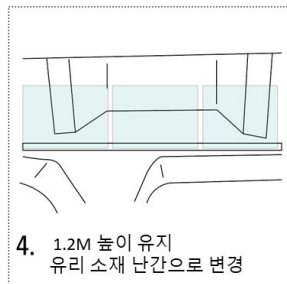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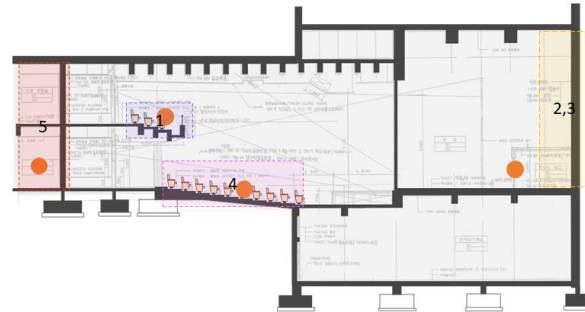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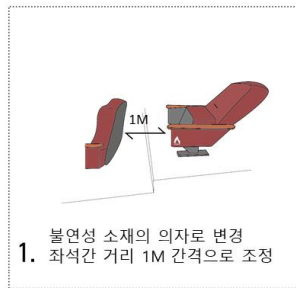


<그림 64> 기획전시 공간을 복합공간으로 전환

## ② 극장계획

- 원도심을 다목적극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극장과 소극장에 대한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음.
- 중극장의 경우 관람자 동선과 공연자 동선은 기존의 동선을 유지하되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계획함.
- 관람자 동선의 경우 객석의 거리 및 시야 그리고 관람을 위한 기본적인 바닥 마감에 대한 부분이 불연재, 객석의 폭, 그리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적어도 객석 간격은 1m 이상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바닥의 경우 소음과 잔향 그리고 빛 반사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펫형식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공연자 동선에서는 분장실, 대기실, 그리고 쿼체인지 공간을 추가하여 원도심 내 공연장으로서 기능을 극대화하여야 함.
- 특히 서비스 공간인 수유실 및 베리어 프리에 준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그 외에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 조명, 음향, 무대장치 등을 현대화하는 방식 또한 선행되어야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 (대상시설)



5. 수유실, 점자 블록 등 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 (대상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종류
- 매개시설: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내부시설: 출입문/복도, 계단/승강기
  - 위생시설: 화장실, 욕실/사위실/탈의실
  -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조명분야

1. 무대상부 머리막



해결방안  
3조 정도의 머리막 설치  
재질 : 빛 투과 없는 선방염 처리가 된 면 벨벳(600g/m² 이상)

2. 현수막 버튼 위치 부적정



해결방안  
보더라이트 철수  
철수한 공바들은 무대앞쪽 1m 이동설치 하여 현수막 버튼으로 활용  
보더라이트 속 조명채널 이동

3. 와이어로프 간섭



해결방안  
다열활차 또는 롤러 설치  
활차 위치 조정으로 그리드 아이언 구조물과 와이어로프의 간섭 방지

무대분야

1. 디머(Dimmer) 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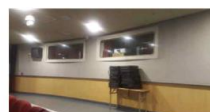
해결방안  
디머(Dimmer) 교체 및 이전  
SSR 또는 SCR 방식의 제품 중 사후관리 및 부품공급이 원활한 제품 선정하여 교체  
창고 및 조정실에 나누어져 있는 디머를 한 곳으로 비치

2. RD회로, DMX 신호선 설치



해결방안  
디머 교체와 더불어 RD회로의 증설  
각 Batten 당 두개 이상의 다이렉트 회로와 DMX 설치

3. 조정실, Follow Pin Light 위치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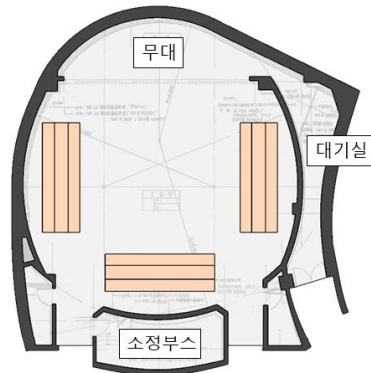


해결방안  
1층 객석 뒤 오픈형 부스 개설  
2층 조정실 Follow Pin Room 전환  
2층 객석 사용시 발생하는 민원 발생 원인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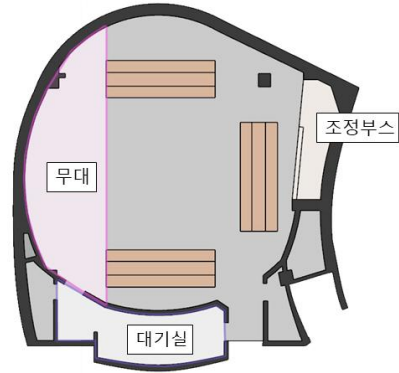
<그림 65> 다목적 기능 수용-중강당 세부계획

- 소극장은 기존 공연 가운데 연극공연을 특색있게 꾸미기 위해 무대 및 객석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조정실을 대기실로 전환하고 대기실은 오픈형 조정부스로 조정하여 최소한으로 공간을 유지하면서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계획함.
- 수납식 객석을 설치하여 객석 자체의 무게를 감소하는 동시에 수납의 기능을 확보하는 형식을 제안함.
- 그 외 조명 및 무대의 경우 노후화된 부분은 교체하고, 와이어 로프 및 상부 캐워크를 설치하여 공연의 질을 높이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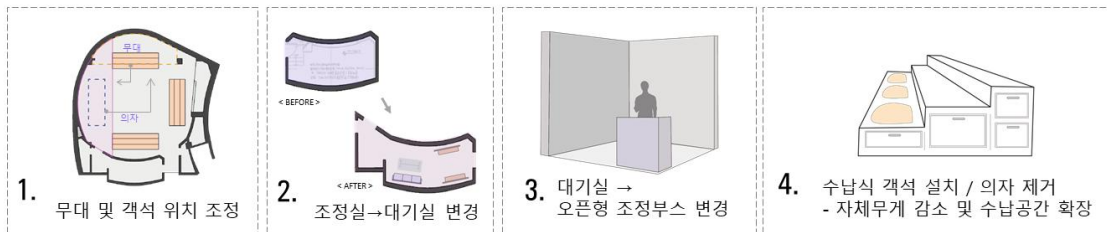




< BEFORE >



< AFTER >



#### 조명분야

##### 1. 와이어로프 간섭



**해결방안**  
와이어로프 간섭 수정  
다열할차 또는 롤러를 설치하여  
와이어로프가 간섭되지 않도록 조정

##### 2. 와이어로프와 가이드홀 간섭



**해결방안**  
와이어로프와 가이드홀 간섭 수정  
가이드 홀의 위치 이동 또는 크기 확장하여  
와이어로프가 간섭되지 않도록 조치

##### 3. 조명버튼 상부 캐뮴크 부재



**해결방안**  
상부 캐뮴크 추가 설치  
수시점검, 안전의 확인 및 기계고장 수리 등의  
이유추가설치 필요

#### 무대분야

##### 1. 노후된 조명 기자재 교체 및 콘솔, 무비라이트 구매



**해결방안**  
조명기자재  
1. Fresnel Spot Light 2. Ellipsoidal Spot Light 3. PAR Light  
순으로 교체  
**무비라이트**  
Moving Light WASH, Moving Light SPOT 구매

### <그림 66> 연극 및 소공연 수용- 소강당 세부계획

#### ③ 법적 검토사항

- 이러한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 검토가 필요함.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리모델링에 의한 프로세스가 필요하며 극장시설의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문화재 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에 따라 실행되어야 함.
- 리모델링의 경우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구조 안전진단이며 이를 통해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민주항쟁기념관의 경우 이러한 복합기능을 수용하고 원도심 거점 앵커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함.

- 이를 통해 전시공간 및 공연공간에 따라 주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동선과 공간 개선을 목적으로 리모델링을 시행하여야 함.
-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사용자나 건물주의 선호도, 건물의 시대적 요청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의 개선이 필요.
- 실 크기 및 레이아웃 변경 등으로 공간변경에 따른 구조해석과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구조보강이 선행되어야 함.
- 또한 건축법에 의거하여 해당 건축물은 문화집회시설 및 다중 이용시설에 준하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함.

## Remodeling Process



<그림 67> 리모델링 절차

### - 리모델링 관련 법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1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진·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물의 개요, 안전진단의 범위 및 과업 내용 등 안전진단의 개요
2.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및 보수·보강 이력 등 자료수집 및 분석 결과
3. 외관조사 결과 분석, 재료 시험·측정 결과 분석 등 현장조사 및 시험 결과
4. 건축물의 상태평가 결과
5. 건축물의 구조해석 등 안전성평가 결과
6. 건축물의 종합평가 결과
7. 보수·보강방법

8. 종합결론 및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안전진단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안전진단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해당 관리자,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 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건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건축설계 관련 법규 제2조(문화집회시설 / 준다중이용시설)

제2조(정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1.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2. 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3. 가스설비 :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⑥ 3층 이상인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공사가 제18조의 2 제2항 제3호나 목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법 제6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1)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 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 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4. 11. 28., 2018. 12. 4.>

⑧ 제32조 제1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 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16., 2013. 5. 31., 2014. 11. 28., 2018. 12. 4.>

⑨ 법 제6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신설 2016. 7. 19., 2018. 12. 4.>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대상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 (1) 공연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2)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관람장(경마장·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4)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제4조 (편의시설의 종류)

###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1)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p>(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 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p>
(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p>(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p> <p>(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p>

(3) 높이 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p>(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 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앨 수 있다.</p>
(4)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p>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2 제6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p>
(5)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p>복도는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6)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	<p>(가) 장애인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p> <p>(나) (가)의 건축물 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p>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p>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8)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욕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 이상을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p>(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 출입구 부근에 점자 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그 밖의 유도 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삭제&lt;2007.2.12&gt;</p> <p>(다)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복지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 밀집 거주지역 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p> <p>(라)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 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p>
(12)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p>(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 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 등·통로유도 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장애인 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p>
(13)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기숙사 및 숙박시설 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관광숙박시설은 3퍼센트 이상)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
(14)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열람석 또는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	(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가 2천석 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

	<p>람석 또는 열람석 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p> <p>(나)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p>
(15)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p>지역자치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p>
(16)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p>매표소(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 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p>
(1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p>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시설 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p>



<표 9> 문화 및 집회시설 시 이행조건표

편의시설   	
--	--

#### 4) 소결

- 본 계획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한 기본계획에서 통합적인 관리와 일상적인 결합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기능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함.
- 주요 계획은 지역의 앵커기능 강화와 역사유산의 보존활용, 그리고 통합적인 관리운영시스템을 위한 도심형 공원기능과 공공 디자인계획을 제안함.
- 권역별 계획에는 부산대학교 중심의 스토리 장소공간으로서 기능, 서면로터리 중심으로 도심형 공원으로서 기능 확장, 원도심 중심으로 역사유적 보존활용 및 지역 앵커기능의 구심점에 대해 제안함.
- 특히 민주공원 중심의 민주역사문화 필드뮤지엄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 각 거점시설별 역할과 키워드를 도출하여 제안함.
- 거점별로 살펴보면 민주항쟁기념관은 민주주의 역사의 상징기능과 원도심 복합 문화공간의 결합, 민주공원사료관은 역사아카이빙과 수장과 정보의 집적화, 그리고 중앙도서관은 부산문화기록과 지역 커뮤니티기능 강화, 광복기념관은 추모의 기능 집중, 그리고 기념광장 기념물의 경우 필드뮤지엄의 브릿지 역할로서 재배치되었으면 함.
- 이를 통해 부산의 역사와 함께 민주화운동 간의 연계성을 공간적, 기능적, 그리고 콘텐츠 및 프로그램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

구분	대상	주요과제(키워드)	세부과제	비고
01	민주항쟁기념관	민주주의 역사의 상징 기능 + 원도심 복합문화공간의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진보강 및 안전점검 실행</li> <li>- 전시기능의 경우 기존의 민주주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높이는 전시문제로부터 전시 트랜드의 노후와 공간의 활용의 변화 필요</li> <li>- 원도심 공간기능의 역할 강화를 위한 복합공간으로서의 전면적인 리모델링 필요</li> <li>- 기획전시는 전시기능 이외 프로그램체험기능까지 확장 필요</li> </ul>	구조안전진단 우선 복합문화공간 결합
02	민주공원사료관	기록의 역사 아카이빙 + 수장 및 정보의 집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신축건축물로 민주주의 관련 키워드의 자료의 집적화</li> <li>- 이를 위한 기록, 정보, 수장 기능강화</li> <li>- 아키비스트전문가 양성기능 포함</li> </ul>	아카이브 기능강화
03	중앙도서관	부산문화 기록의 역사 아카이빙 + 지역커뮤니티 프로그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점시설 주변 민주공원과 연결동로 확보(추진예정)로 보행동선이 확보됨에 따라 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공간으로 활용</li> <li>- 지역커뮤니티 동아리 모임 및 부산지역문화 랩의 기능 연결로 집객과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 전환</li> </ul>	커뮤니티문화 기능강화
04	광복기념관	광복이전의 추모의 기능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추모 기능을 강화하여 오브제적 전시와 추모기능을 결합한 공간구성 재설정</li> <li>- 공간의 협소함에 따라 다양한 기능 보다는 추모의 기능으로 리모델링 필요</li> </ul>	추모의 기능 재구성
05	기념광장 및 기념물	필드뮤지엄의 브릿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19광장을 비롯한 주변 기념물과 광장의 기능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결하여 투어 코스로 개발</li> <li>- 필드뮤지엄의 중간 브릿지 역할로 활용 (바닥패턴디자인과 환경디자인을 통해 연계성 확보)</li> <li>- 코스개발과 통합적 해설을 통한 청소년 및 지역민들의 참여를 유도</li> </ul>	4.19광장 내 분향소 재정비 필요 공공디자인으로 연계성

<그림 68> 민주공원 중심 민주역사 문화 필드뮤지엄을 위한 세부 역할 및 과제

## V. 추진전략 및 재원조달 방안

### 1. 정책 목표 및 비전, 추진전략

#### 1) 비전

- 민주주의 가치 공유와 확산
- 민주화운동의 미래유산화

#### 2) 목표

- 기념사업의 현재화
- 부산 정체성 만들기

#### 3) 추진전략

<표 10> 추진전략

지표	세부 추진과제	추진전략
기념, 추모, 치유	합동추모제	-다양한 대상자, 관련 단체와 협의 필요 -추모제는 매년 진행하되, 추가 대상자 논의 필요 -추모제 형식은 문화축제형으로 추진 -비대면 온라인 추모공간을 홈페이지에 제작할 필요
	열사 기념 영상 및 출판물 제작	-공모제 형식을 통해 추진 -매년 1-2건의 결과물 생산
	문화행사 기획 전문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문화기획 전문인력 활용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지원 -공모형으로 운영
	치유 프로그램 운영	-국가폭력 피해자로 범위 확장 -치유 대상자 파악
	치유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및 예산 편성	-지역의 의료기관과 협력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추진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
연구 및 자료 조사	역사현장 발굴, 보존, 활용	-연구용역 필요(1회)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운영
	역사보존검토위원회 운영	-상설위원회 설치, 운영

	민주화운동 자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건별, 분야별 계획 수립</li> <li>-자료 유형별 조사 진행</li> <li>-기증자료 수집</li> <li>-매년 사업 필요</li> <li>-추가 연구인력이 확보될 때까지 연구용역으로 진행할 것</li> </ul>
	민주화운동 연구 사업(학술발표회 개최, 연구총서 및 학술지 등 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술발표회는 3년 단위의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진행</li> <li>-연구총서는 학술발표회 성과를 단행본으로 간행(3년 1회)</li> <li>-학술지 구성은 학술발표회 발표 논문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를 지향할 것</li> <li>-등재지 이전까지 연구비 지원을 고려할 것</li> </ul>
	민주화운동 자료 체계화 및 목록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계화 목록화는 계속 사업화</li> <li>-전문능력을 겸비한 인력을 활용할 것</li> <li>-국가기관 지원사업비로 추진을 고려할 것</li> </ul>
	사료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산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시설로 만들것</li> <li>-독립기구에 걸맞는 인력확보(관리, 연구 인력 등)</li> </ul>
	연구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MOU체결</li> <li>-학위논문 작성 지원</li> <li>-연구인력은 연구 자료조사 3명, 교육 2명, 홍보 1명, 문화기획 1명이 추가 필요</li> </ul>
교류 협력	국내외 기관과 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연대사업의 평가</li> <li>-사업의 연대만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하는 홍보 필요</li> </ul>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의체 구성</li> <li>-업무 협약을 위한 MOU체결</li> </ul>
	해외 기관 단체, 연기관과 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홈페이지 활용</li> </ul>
교육	초중고 민주시민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청과 MOU체결, 예산확보</li> </ul>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년 일정 수의 해설사 교육과 재교육 필요</li> <li>-해설사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li> </ul>
	지역대학 교양교육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대학 교양교육 강좌 개설 노력</li> <li>-교과, 비교과 모두 운영 가능</li> </ul>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 단체, 동아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 단체 현황파악</li> <li>-활동 사항 파악</li> </ul>

	민주화운동 조사 자료를 활용한 스토리 개발	-민주화운동 자료 조사팀과 협업 -스토리를 활용한 교육 자료 개발
	교사, 공무원, 기업 등 연수교육 운영	-각 계층, 직군과 MOU 체결 -부산 인재개발원과 공동진행
	비대면 콘텐츠 개발 운영	-민주화운동 관련 비대면 자료 제작, 수집 정리 -홈페이지를 통한 활용
	민주화운동 가치 교육	-부설기관 활용
홍보	홈페이지 운영	-홈페이지의 활용도를 제고 -예산 및 전문가 확보 운영 -외국어판 제작
	민주화운동 홍보단 운영	-타 지역 사례 검토 -다양한 계층, 직군의 홍보단 마련
	지역사회(경제)와 상생을 통한 굿즈 개발	-지역사회 문화 예술 단체와 협업
시설	민주공원 기념 전시공간의 위상 제고	-민주공원 전시공간의 재검토 -노후시설의 안전진단 필요 -시설 개선 계획 수립

## 2. 연차별 추진계획

<표 11> 연차별 추진계획

지표	세부 추진과제	추진시기				
		'22	'23	'24	'25	'26
기념 추모 치유	합동추모제		●	●	●	●
	열사 기념 영상 및 출판물 제작			●	●	●
	문화행사 기획 전문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	●	●	●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	●	●	●	●
	치유 프로그램 운영				●	●
	치유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및 예산 편성				●	●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추진	●	●			
연구 및 자료 조사	역사현장 발굴, 보존, 활용		●	●	●	
	역사보존검토위원회 운영		●	●	●	
	민주화운동 자료 조사	●	●	●	●	●
	민주화운동 연구 사업(학술발표회 개최, 연구총서 및 학술지 등 간행)	●	●	●	●	●
	민주화운동 자료 체계화 및 목록화	●	●	●	●	●
	연구인력 확보		●		●	
교류 협력	국내외 기관과 연대	●	●	●	●	●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	●	●	●	●
	해외 기관 단체, 연구기관과 연대		●		●	
교육	초중고 민주시민교육	●	●	●	●	●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	●	●	●	●
	지역대학 교과목 운영 지원		●	●	●	●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 단체, 동아리 지원			●	●	●
	민주화운동 조사 자료를 활용한 스토리 개발			●	●	●
	교사, 공무원, 기업 등 연수교육 운영		●	●	●	●
	비대면 콘텐츠 개발 운영	●	●	●	●	●
	민주화운동 가치 교육	●	●	●	●	●
홍보	홈페이지 운영	●	●	●	●	●
	민주화운동 홍보단 운영			●	●	●
	지역사회(경제)와 상생을 통한 굿즈 개발				●	●
시설	민주공원 기념 전시공간의 위상 제고		●	●	●	

### 3. 재원조달 방안

#### 1)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재원조달 현황

<표 12> 2020년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수입구조

	2020년 총 수입항목		비율
회비	회원회비	128,912,500	27.29%
	특별기부금	6,000,000	1.27%
운영수입	국비보조금	308,000,000	65.21%
	지정사업지원금	26,600,000	5.63%
	이자수입	156,280	0.03%
합계		472,326,723	

자료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20년 결산 자료」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수입 구조의 특징은 2020년을 기준으로 국비보조금 308,000,000원, 수탁기관 민주공원의 수탁운영예산이 부산시 보조금으로 1,524,000,000원, 이외 사무국과 부설기관은 회원회비, 공모사업 등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음.
- 지출 구조의 특징은 2020년을 기준으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받는 국비보조금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학술 연구, 교류, 교육사업에 지출되고 있음. 5.18 기념재단의 주요 사업과 일치하고 있음. 두 기관의 유사 분야 사업임에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국비는 5.18기념사업회의 30% 정도에 그치고 있음. 국비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민주공원 수탁운영예산으로 부산시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은 인력운영비, 관리운영비 지출에 주로 사용되고 있어, 사업비로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시비의 증액을 통해 연구인력 증원과 관리운영비 확대를 통해 노후시설 개선과 새로운 방법에 의한 전시시설의 개선이 필요함.

#### 2) 5.18기념재단 재원조달 현황

<표 13> 2020년 5.18기념재단 수입 구조

	2020년 총 수입항목		비율
재산수입(이자)	이자수입, 보조금 이자수입	290,243,702	6.45%
보조금	국비보조금	2,720,000,000	72.27%
	광주시보조금	500,000,000	
	광주시마라톤보조금	27,000,000	

	소계	3,247,000,000	
기타수입	교과서수입	103,990,500	4.26%
	자료발송 및 기자수입	37,243,251	
	지정기부금	44,087,950	
	각종행사참가비	6,000,000	
	소계	191,321,701	
선납법인세	법인세환급금	47,958,780	1.06%
이월자금		715,913,789	15.94%
총계		4,492,437,972	

자료 : 5.18기념재단, 「2020년 세입 세출결산서」

- 5.18기념재단 수입에서 가장 큰 부분은 72%를 차지하는 보조금임. 이 가운데 국비보조금이 60%(27억 2천만원)를 구성하고 있음. 상대적으로 시보조금은 5억 원 정도로 비중은 적으나, 절대액은 적지 않음.
- 기념재단의 활동과 관련한 수입으로는 기타수입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교과서 판매 수입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지정기부금 또한 일정액을 유지하고 있음.
- 5.18기념재단의 주요 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기념사업, 국제연대, 교육문화, 학술연구, 진실조사에 약 60%를 수행하고 있음.
- 지방비보조사업은 5.18역사왜곡저지대책 추진, 민주인권인적교류프로젝트, 5.18 전국화 세계화, 마라톤 행사에 충당하고 있음.
- 5.18기념재단의 주요 사업 경비는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보조로 구성되어 있음.

### 3) 시사점

- 부산 민주화운동 관련 재원은 시비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부산시로서도 적지 않은 재정부담을 안고 있음. 그렇지만 부산시 지원 예산의 대부분은 시설 관리 운영 비용이고,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비는 최소한으로 제한되어 있음.
- 현재 민주화운동, 항일독립운동 등 역사바로세우기를 지향하는 기념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지원을 필요로 함. 부산시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재원마련과 지원이 필요함.
- 민주공원이나 여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부산시 지원 예산에서 사업비를 증액하여 민주화운동 및 항일 독립운동 기념사업, 그리고 더 나아가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